

월간

나라재정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Mar. 2019

Vol. 27

3



재정 INSIGHT

KPFIS 인사이트

국민참여예산제도와 2019년 운영 방향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재정 칼럼

유희 국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

툰아보기

재정 NOW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키워드 재정

해외재정동향

재정 STORY

이달의 재정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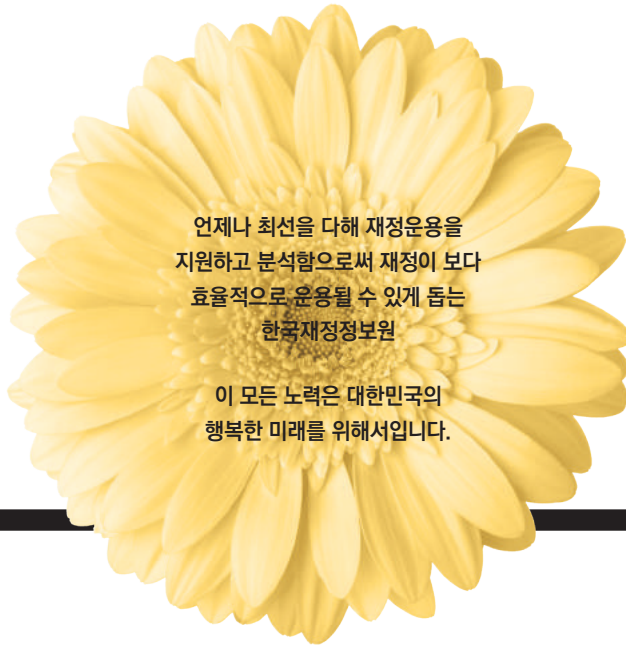
재정 Talk Talk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언제나 최선을 다해 재정운용을
지원하고 분석함으로써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 돕는
한국재정정보원

이 모든 노력은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행복한 ‘미래 디자이너’

대한민국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한국재정정보원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Vol. 27 March. 2019

월간 나라재정

발행처 한국재정정보원
주소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전화 02-6908-8200
팩스 02-6312-8959
홈페이지 www.kpfis.or.kr
발행인 김재훈(한국재정정보원장)
문의 재정정보활용부(02-6908-8583)
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02-786-2999)

재정 INSIGHT

04 KPFIS 인사이트

- ① 국민참여예산제도와 2019년 운영 방향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
- ②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현석 dBrain운영본부 차장
장성준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

18 재정 칼럼

- ① 유휴 국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②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희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박사

28 톺아보기

국유재산의 현황과 활용

재정 NOW

30 숫자로 보는 나라 재정

- ① 최근 재정통계
- ② 분야별 통계 : 환경

46 키워드 재정

이달의 이슈 키워드 : 교육

50 해외재정동향

EU의 경제전망과 재정지속가능성

재정 STORY

54 이달의 재정 이야기

2018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

58 재정 Talk Talk

초과세수는 어디에 쓰이나요?

60 인문학으로 풀어본 재정의 역사

조선시대의 이자제한법

64 풀어쓰는 재정·경제 이야기

유럽 황제들의 재정을 좌지우지한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

68 KPFIS의 서재

70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01
KPFIS-인사이드국민참여예산제도와
2019년 운영 방향

심혜인 재정정보분석본부 부연구위원(hyein@kpfis.kr)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 순위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1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8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현재 국민이 직접 제안한 38개 사업, 9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시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019년 2월 13일~4월 15일까지 약 2개월 동안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사업을 접수 받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배경과 2018년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고 2019년 운영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01

● 국민참여예산제도 개요

국민참여예산제이란 국민이 정부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참여예산제도의 유래는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포르투 알레그레의 사례가 주민참여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으며 미국, 스페인, 독일 등 전 세계 도시들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는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 편성 과정에도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재정법」 제16조¹와 동법 시행령 제7조2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도가나 정부 제안제도만 시행되던 과거에 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은 훨씬 넓어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제안·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대한 사업 제안은 제외되어 있는데,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제안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과거 일반국민이 정부 업무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내거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제안제도가 운영되어 왔으나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던 반면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국민의 제안 이후 사업심사 및 우선순위 결정 과정까지 국민들의 참여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²

¹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에서는 정부가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² 과거에도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라살림 아이디어나 정책고객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는 하였으나 직접적인 반영은 어려웠다.

02

도입 및 추진 경과

정부는 2018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2017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전담 조직 신설, 법적 근거 명확화, 운영방안 및 세부 지침 마련,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제도의 체계적인 설계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를 거쳤다.

국민참여예산제도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2017년 4월 중순부터 약 6주 동안 공모전을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여기서 모인 368개 나라살림 아이디어와 광화문 1번가 제안 사업들에 대해 해당 사업 부처의 검토를 거쳐 사업화가 가능한 제안들로 10개의 후보 사업을 선정하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통해 필요성이 크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 422억 원 규모의 6개 참여예산 시범 사업들³이 결정되었으며, 2018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되었다.

2017년 9월 기획재정부 내에 참여예산과를 신설하였으며, 2018년 예산에 예산국민참여단, 참여예산지원협의회, 예산학교의 운영과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홍보, 관리 등을 위해 19억 원을 새로이 편성하였다. 또한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에 대해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12월 29일 공포 및 시행하였다.⁴ 한편, 정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와 학계·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간담회를 통해 운영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민간전문가 및 주민참여예산 관련 담당자와의 간담회,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2018년 1월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기본 방향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의 틀 내에서 운영한다.
- 둘째,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중앙정부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 셋째,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한다.

³ 6개의 참여예산 시범 사업은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 지원, 어린이집 등 하원 자동 알림 서비스, 365일 일자리 상담 서비스 운영, 농촌 지역 일손 부족 해소, 농어촌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병행 설치,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 지원이다.

⁴ 신설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절차 마련의 근거 명확화(1항), 예산편성시 국민 의견의 효과 규정(2항), 국민참여를 위한 참여단 설치의 근거 마련(3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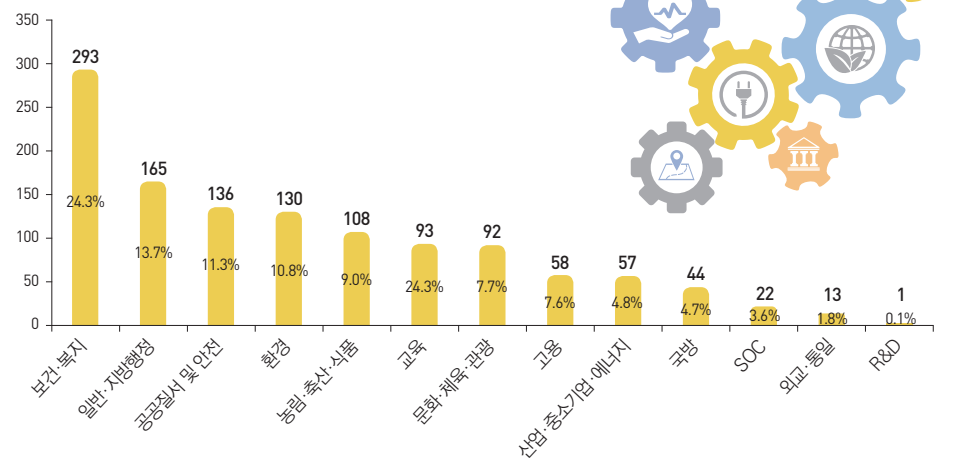
03

● 「2019년 국민참여예산」 현황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접수는 2018년 3월 15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었다.⁵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지역별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통해 국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약 한 달간 1,206건의 국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일반·지방행정뿐만 아니라 외교·통일 등 전 분야를 걸쳐 다양한 사업이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293건, 24.3%), 일반·지방행정(165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으로 복지·사회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 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국민의 제안이 집중되었다.⁶

그림 1. 2018년 분야별 국민 제안 예산사업 현황



자료: 기획재정부, 「2018 국민참여예산 운영 보고서」, 2019

⁵ 이는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을 숙성하여 5월 말까지는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⁶ 주요 분야별 제안 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 의약품 가격 정보 알리미 시스템, 영유아 가정 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업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확충 등 출퇴근 관련 지원 사업, 대국민 행정 정보 제공 사업 등을 중심으로 165건의 사업이 접수되었다. 24시간 지하철 운행, 대중교통 와이파이파워 확충 사업 등이 제안되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치안 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 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되었는데, 인공지능(AI) 활용 자살 예측 플랫폼 구축, 재해 대응형 자판기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130건이 제안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 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이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 사업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1,206건의 국민 제안은 소관별로 각 부처에 보내져 합법성, 유사성, 공익성, 효과의 범위, 효과의 지속성의 5가지 측면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적합하다고 판단된 제안에 대해서 예산사업으로 숙성하는 과정을 거쳤다.⁷ 결과적으로 각 부처는 102개 사업 1,692억 원의 국민참여예산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다.

예산국민참여단은 부처의 예산안 요구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논의 및 1차 사업 선별 작업을 진행하여 56건 1,106억 원 규모로 압축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한 예산국민참여단 투표와 1,000명의 일반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50:50으로 반영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39개 사업 835억 원을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정부안(835억 원)에 비해 약 11.1% 증가한 38개 사업 928억 원 규모가 2019년도 예산으로 확정되었다.

⁷ 이 과정 속에서 제안자와 협력하여 제안 취지에 맞도록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소요 금액도 산정하였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 중에서 유사한 것들은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기도 하였다.

표 1.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사업

(단위: 백만 원)

분과	부처	사업명	정부안	최종확정
복지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지원 사업	235	235
	보건복지부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	931	931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 지원 사업	1,663	1,663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 안전관리 사업	1,501	947
	여성가족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사업	800	8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안전정보 송출 사업	500	5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접객업소 알레르기 예방 홍보 사업	300	300
	합계		5,930	5,376
사회	환경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개선 사업	411	411
	환경부	지하수 관리 사업	1,510	1,510
	환경부	주택가 RFID 음식물쓰레기 처리 장비 보급 사업	446	-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보 플랫폼 기반 인공지능 고용 서비스 지원 사업	6,455	5,815
	문화재청	문화재로 인한 국민의 재산 피해 지원 사업	3,000	2,500
	환경부	도시 미세먼지 저감·회피 사업	492	492
	환경부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제거(저감) 장비 설치 사업	7,718	19,998
	고용노동부	청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사업	480	480
	환경부	미세먼지에 의한 건강 피해 저감 사업	300	150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	620	620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사업	208	208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전문체육 및 국제체육 지원 사업	153	153
	합계		21,793	32,337
경제	해양수산부	지역 주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	1,620	810
	산림청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 사업	1,031	1,031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 숲 조성 사업	30,000	30,000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건강영향평가 사업	3,350	1,650
	국토교통부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지원 사업	1,342	1,342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442	442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사회적 약자 전용 객실 확충 사업	1,319	1,319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UX 개선 사업	200	100
	합계		39,304	36,694
일반 행정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방제 활동(무인 비행기·드론 도입) 사업	608	608
	소방청	찾아가는 화재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사업	621	621
	국가인권위원회	e-진정 시스템 구축 사업	1,625	1,625
	국민권익위원회	지역별 고충민원 전담 처리센터 운영 사업	63	63
	행정안전부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비용 지원 사업	2,260	2,260
	행정안전부	민간시설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2,250	2,25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358	257
	경찰청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개발 사업	50	50
	방송통신위원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방송 시스템 개발 사업	1,500	1,100
	해양경찰청	경비 합정 근무 의무경찰을 위한 공기청정기 도입 사업	82	82
	국세청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5,000	2,500
	국방부	장병 패딩형 동계 점퍼 시범 지급 사업	2,046	6,969
	합계		16,463	18,385
총계			83,490	92,792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국민참여예산 총 39개 사업, 835억 원 반영」, 2018. 8. 2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민참여예산 2020년도 예산사업 국민 제안 접수」, 2019. 2. 12.

04

『2020년도 예산안』의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향

정부는 국민 참여가 핵심인 국민참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의 뜻과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고 운영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 운영 방안은 참여 확대, 소통 활성화,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등 3가지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더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제도 접근성은 높이고 참여 범위와 인원도 확대한다. 예산국민참여단에 제도분과를 신설하여 기존 계속사업의 사업효과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2018년 300명으로 구성되었던 예산국민참여단 인원을 400명으로 확대하며,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1,0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려서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한편,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참여예산 운영과정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참여 국민들이 상호 토론 및 정보를 공유한다. 페이스북(facebook)에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그룹계정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참여단·제안자 등 국민·전문가·정부의 모든 참여자가 참여예산 콘텐츠를 공유한다. 참여예산 편성·집행 등 프로세스, 국민소통 이벤트 등의 자료를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정부·국민 간 소통을 강화한다. 또한 국민 제안 접수기간의 상시화, 찾아가는 사업제안 설명회 확대 등을 통해 현장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민 제안 예산 사업을 2019년 2월 13일~4월 15일까지 약 2개월간 접수 받고 있다.⁸ 제안 대상 사업은 환경, 보건·복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등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사업의 경우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신규사업 중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⁹에 한한다. 또한 신규사업 제안만을 접수받았던 작년과는 달리, 2019년에는 기존 계속사업의 개선 의견도 제안받는다.¹⁰

2019년 국민들이 제안하는 예산사업은 사업제안(2~5월), 사업논의(6~7월), 선호도 조사(7월), 정부예산안 반영(8월) 등 4단계의 절차를 거쳐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9월~12월)된다.

⁸ 올해부터는 연중 상시 사업을 접수받으나, 각 부처가 사업을 숙성시켜 5월 말까지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4월 15일까지 제안된 사업의 경우 2020년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하고 4월 16일 이후 접수된 사업은 다음연도 예산사업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⁹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란 총사업비가 500억 원 미만(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38조 참고).

¹⁰ 즉, 사업효과 미흡 또는 예산낭비 우려 사업, 제도개선으로 사업효과 향상이 가능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전달체계, 운영방식, 지원기준 개선 등 사업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아이디어도 제안할 수 있다.

그림 2.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2019년 일정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국가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2018년 처음 시행된 만큼 안정적으로 제도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국민-정부 및 국민 상호 간 소통을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모든 참여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호 소통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으로 더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향후에는 참여예산사업의 예산 편성 과정뿐만 아니라 선정된 사업의 집행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02

KPFIS-인사이드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동향과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이현석 dBrain운영본부 차장(DBOPLHS@kpfis.kr)

장성준 e나라도움운영본부 과장(DBOP1102@kpfis.kr)



01

● 유행어가 되어버린 인공지능

구글의 알파고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발전하면서 그 영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확대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공지능’은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생소한 용어였지만 지금은 TV만 틀어도 인공지능 기능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의 광고를 볼 수 있다. 또한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상담원과 업무 상담이 가능한 금융 봇을 출시되는 등, 우리 생활에 점차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의 정확한 실체와 현재 기술수준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 위키백과의 정의에 따르면 사전적으로는 인공지능은 기계로부터 만들어진 지능을 말하며, 컴퓨터공학에서는 이상적인 지능을 갖춘 존재, 혹은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지능을 뜻한다. 이는 사람의 지능과 같이 지식을 학습하고 추론하여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음성/이미지 인식, 자연어 처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처리과정을 통해 외부의 다양한 상황과 환경 정보를 학습하고 추론하여 시스템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공지능의 구성



02

● 인공지능의 오해

인공지능은 크게 강 인공지능(Strong AI)과 약 인공지능(Weak AI)로 나뉜다. 강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다양한 문제에 대해 사고(思考)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지능을 의미하며, 약 인공지능은 답마인드의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거나, IBM 왓슨¹처럼 주어진 퀴즈문제의 답을 찾아내는 식의 특정 영역을 지능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약 인공지능은 이미 특정한 영역에서는 인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다고 볼

¹ IBM에서 인간의 언어로 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질의-응답 시스템으로 2011년 2월 미 퀴즈쇼 “제퍼디!”에 참가하여 인간과의 퀴즈대결에서 우승한 적 있다.

수 있지만 모든 분야를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강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SF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든 문제를 인간처럼 받아들이고 생각하며, 해결하기 위한 강 인공지능의 개발은 아직 요원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의 인공지능을 강 인공지능 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03

●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중 가장 사용자의 관심을 끄는 것은 대화형 시스템이다. 빅데이터에 이어 음성인식과 자연어 처리, 머신러닝 기술의 발달을 통해 인간과 대화가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즉, 챗봇(Chatbot)으로 향후 음성 봇과 결합해 인공지능 비서의 형태로 점차 발전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와 달리 현재 세대는 스마트폰 텍스트 대화 위주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이어져 금융, 공공, 쇼핑, 통신 등 고객지원이 필요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챗봇의 도입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04

● 챗봇의 개념

챗봇은 사람과의 문자나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로² 스마트폰 채팅앱과 같은 모양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사용자는 마치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챗봇의 기본적인 개념은 컴퓨터의 역사만큼 오래 되었다. 1950년 앨런 튜링(Alan Turing)에 의해 봇³의 개념이 제안되었으며, 1966년 인공지능 연구실의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 재직하던 조셉 와이젠바움(Joseph Weizenbaum) 박사가 개발한 심리상담 봇인 엘리자(ELIZA)가 처음 튜링테스트⁴를 통과한 이후 인터넷 보급과 검색 서비스의 발달에 힘입어

² <http://www.itworld.co.kr/news/99209>를 참조하였다.

³ 봇은 사용자의 입력을 기반으로 단순한 동작을 가능하게 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총칭하며, 챗봇은 봇의 일종으로 인터페이스 내에서 동작한다.

⁴ 기계가 인공지능을 갖추었는지를 판별하는 실험을 의미한다.

수많은 대화형 챗봇이 등장하게 되었다.

가장 초기의 챗봇은 정해진 대답만 하는 수준으로 진정한 의미의 대화라 할 수 없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와 비약적인 발전과 최근 딥러닝, 머신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챗봇은 스스로 응답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의 챗봇은 '채팅(Chatting)이 가능한 로봇(Robot)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하고 반복되는 언어들을 학습하여, 일부 입력되지 않은 단어나 오타자가 있어도 문맥과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더욱 자연스러운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1.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발전 방향

구분	과거	현재	미래
단계	· 규칙/검색 기반 · FAQ 수준	· 대화 시스템 가능 · 심층 질의응답	· 개인 맞춤형 서비스 · 감정인지
내용	· 일방향 소통(질문 → 답) · 검색을 통한 결과 제공	· 양방향 소통(대화를 통한 의도 파악) · 간단한 업무처리 · 학습을 통한 지능 향상	· 감정 교류를 통한 서비스 · 사용자의 패턴·상황을 고려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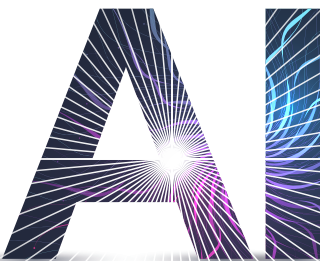
05

● 국내외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 챗봇 도입 현황

콜센터 상담, 은행 보험사 및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연계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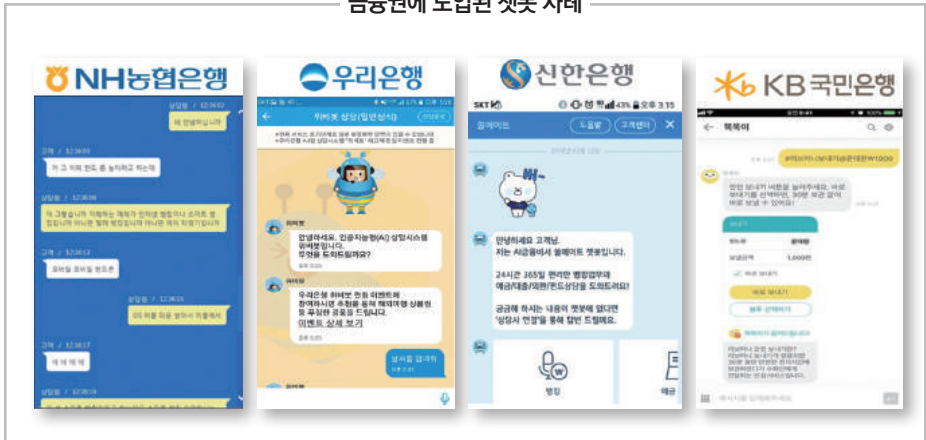
표 2.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의 도입 현황

분야	종류	관련 기업
대화형 커머스 및 O2O	쇼핑, 비행기 예약, 숙소 예약, 레스토랑 예약 및 주문, 택시 호출 등	Amazon, eBay, FB, 카카오톡, 인터파크
개인비서	헬스케어, 뉴스피드, 날씨정보, 금융상담, 일정관리, 길찾기 등	Google, MS, Pancho, CNN, 샤오방, Skype, 빅스비, 지니, 시리
공공서비스	법률상담, 세금납부, 민원상담	법무부, 경기도, 대구시
엔터테인먼트서비스	광고, 미디어, 방송안내, 공연 등	Wechat
기업용 메신저	정보검색, 파일공유, 데이터보완, 팀원정보공유, 자동사무화(OA), CRM	Slack, CareerLark, Growbo, w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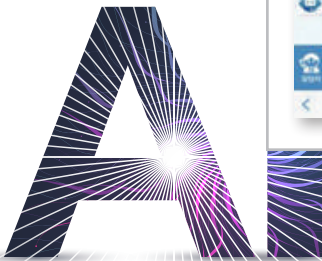
챗봇 시스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단연 금융 분야다. 국내의 많은 금융권에서 챗봇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금융회사들도 고객 상담은 물론 금융비서, बैं킹업무에서 보장컨설팅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챗봇을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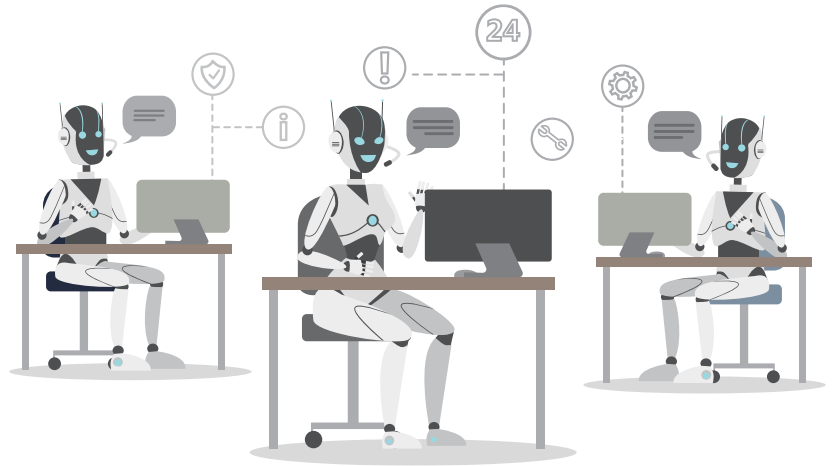
금융권에 도입된 챗봇 사례



또한 최근에는 공공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추세로 지방세 납부, 여권발급 등의 민원상담 서비스 및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법령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등 서비스 영역에서 점차 확대 되고 있다.

공공분야에 도입된 챗봇 사례





06

● 향후 대화형 인공지능 발전 전망

최근 1~2년간 금융권을 시작으로 오픈된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은 쇼핑, 통신 등 대 고객 접점에 있는 다양한 산업군으로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특히 비대면 위주의 O2O서비스 확산은 기존의 웹 중심의 서비스를 인공지능 기반의 봇 중심의 서비스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여러 봇 서비스 중 대화형 인공지능이 챗봇 서비스 진화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서비스 초기 단계로 단순 질의응답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지식구축, 음성인식, 자연어 처리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보다 완성도 높은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을 제공하여, 개인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서비스로 다양한 실생활 환경에 활용되어 삶의 편의성, 업무의 효율화를 제공할 것이다.

07

● 재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 챗봇 도입

올해부터 시작되는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dBrain) 구축 시 그 간에 축적된 고객 상담 정보를 활용하여 챗봇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챗봇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대기시간 없이 24시간 365일 무중단 고객 응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 상담사는 전문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 전반적인 상담 품질 향상 및 고객 만족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한국재정정보원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최신 정보통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성공적인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그 동안 쌓은 dBrain 운영 노하우와 IT 기술을 통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유휴 국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을 위하여

박경돈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과 교수(pkdon0525@ut.ac.kr)



01

국가소유의 재산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되나?

정부가 보유한 국가소유의 토지는 전 국토의 약 23%에 해당하며 나머지 77%의 토지는 민간이 소유한 땅이다. 정부 소유의 국유재산 중 94%가 행정적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이다.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일반재산”은 개발과 매각 등이 가능한 토지이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만 이용이 필요한 토지이다. “행정재산”은 다시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 재산”, 일반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이용하는 “기업용 재산”, 그리고 문화재 등의 유지에 필요한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된다.



국유재산을 감시·감독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다. 가계로 치면 토지 및 건물과 저축을 관리하는 어머니 같은 국가기관이다. 국가의 예산에 해당하는 저축액은 예산·결산과 각종 기금 등의 형태로 - 정치적인 요인이 관여되지 않는다면 -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다. 반면, 국가가 소유한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은 저축에 비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관리 미비 문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의 대부분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은 중앙관서가 다시 지방정부 등에 관리를 재위임·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아파트 관리회사로 이름을 내건 기획재정부가 하청업체에게 관리를 맡기고, 이 하청업체가 다시 하도급을 주면서 실제 관리의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이다. 하나의 기관이 전 국토에 있는 국유재산을 모두 관리하기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며, 지역적으로 매우 넓게 산재되었기에 지방정부에게 위임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유재산이 소재한 행정기관은 과연 총괄청의 요청대로 국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관리가 허술한 국유재산은 없을까?

국유재산 관리 중 관리가 허술한 행정재산을 거론할 때 주요 관심 대상은 “유휴 행정재산”이다. 유휴재산은 위에서 비교 설명한 하도급을 받은 기관이 관리하는 재산이며, 국유재산 중 점유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상태의 재산이다. 그야말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국가의 땅이다.

이용 없는 유휴재산을 국유재산 등급화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과 “활용 불가능한 유휴재산”으로 나눌 수 있다.¹ “활용 가능한 재산”은 나대지, 농경지, 잡종지 등의 재산으로 즉시 임대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나 점유 사용자가 없는 재산이다. “활용불가능 재산”은 점유 사용자 또는 법률 제도상의 제한사항은 없으나 개발이나 임대 등의 운용이 불가능한 국가 재산을 의미한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활용실태 점검 결과, 조사 대상 토지의 대략 15%가 유휴재산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대략 10%로 추정된다.² 방치된 국가소유의 땅이지만 이용 가능하고 운용을 통해 국가적 이익을 증진시킬 당위성과 책임이 지방정부에 있다.

¹ 기획재정부,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2014.

² 기획재정부, 「행정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상시관리체계 구축방안」, 2014.

왜 유휴 국유재산 관리가 필요한가?

그동안 유휴 행정재산을 파악하고 국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노력은 각 중앙 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제도적으로 모든 중앙관서는 직전 연도 연말까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휴 행정재산을 스스로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전수 통계자료가 작성되지 않았다.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가 부실화된 원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부터 찾을 수 있다.

첫째, 우선 개별 관리청은 유휴재산을 점검하여 보고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유휴재산 관리가 엄격하지 못하다. 제출된 보고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으며 보고된 데이터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기재부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이 관리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할애해 두었을까?

둘째, 중앙관서는 자체 유휴재산을 총괄청에 정확하게 보고하기를 주저한다. 왜 그럴까? 관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십 년째 실제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기관의 보유한 자원이다. 이들 기관들은 운용하지 않은 유휴재산이라도 활용 계획을 부실하게 작성한 후 '용도폐지'³ 등을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려는 경향이 크다. 총괄청의 사무를 종합적으로 위임받은 조달청이 행정재산을 조사하여 확인한 사안에 한해서만 중앙관서는 유휴재산으로 인정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

유휴재산, 관리의 사각지대와 동기 결여 사이에서 관리가 멀어진다

유휴재산은 2~3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명시하고 있다. 활용가치가 높은 유휴재산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금전적 가치가 높은 재산은 1년 6개월 마다 한 번 이상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만약 나에게 수십 년째 주요한 토지를 맡겨두고는 관리를 부탁하였지만 거대 토지주는 직접 방문할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실제로 이 땅의 소유주이며 토지주인에게 정확하게 보고할 동기도 결여될 것이다. 어떤 기관이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원이다.

200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태조사, 2009년도 한국감정원의 유휴행정재산 조사,

3. '용도폐지'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 중 당해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장차 사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유재산 중 용도폐기할 수 없는 토지도 있다.



2012년 조달청의 국토정보조사·관리사업의 일환인 유휴재산 조사 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내 국고국은 행정재산의 핵심적인 총괄주체임에도 이 같은 국유재산을 감시·감독하기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조직과 예산으로 운영되어 현실적인 실태파악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관리청은 행정재산을 관리할 전문성이 낮은 상황에서, 총괄청에 부실한 보고 자료를 제출하고, 유휴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유인이 크므로, 행정재산을 활용하여 국토개발과 국부확대를 도모하려는 노력은 지엽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다.

관리가 허술하여 방치된 유휴재산에 대한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상시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우선 전국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는 사무를 위임받은 기관들과 함께 전국적인 유휴재산의 실태 파악에 나설 당위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재산의 규모와 위치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실태 파악 후에는 총괄청은 불필요한 행정재산을 과감하게 용도폐지를 결정, 유휴재산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주차장, 임대 등 수익 및 공익 사업), 그리고 기관의 유휴재산 활용에 대한 한시적 관리제 및 유휴재산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국가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국유재산의 운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소유의 방치된 재산을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런 후에 활용, 이용, 매각할 수 있는 계획과 각종 방안을 세워서 이행타당성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평가해야 한다. 짜투리 땅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활용하려는 일반인들의 인식에 부합하도록 활용하지 않은 국유재산 운용에 눈감고 있지 않도록 공무원의 인식이 전환될 때, 국유재산에 부여된 공적 의무를 다하리라 본다.

국유재산 중 유휴재산의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이지만 진정한 소유주는 국민이다. 국민이 공적인 사용의무를 부여한 토지가 바로 국유재산이다. 방치된 국가의 땅이 있다는 사실은 국민이 부여한 관리 책임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방치한 땅들을 확인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며 가뜩이나 협소한 국토를 효과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길임을 가슴 깊이 인식해야 한다. 간척사업 등을 통해 작은 국토를 넓혀나가는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방치된 국가소유의 땅을 찾고 활용하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

이희정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leeworld@uos.ac.kr)

최희영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박사(hyoung_c@hanmail.net)



02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변화 경향

국유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2조 정의에 따라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이와 같은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이렇게 재산 종류의 구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재산 종류별로 취할 수 있는 관리 형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는 달리 처분(매각), 대부(임대), 사권 설정 등의 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신탁개발이나 위탁개발 등 수익 목적의 개발사업도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행정재산은 당초 정해진 행정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



로 제한되고 행정 용도가 소멸하는 경우가 아니면 용도의 폐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 용도로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기간이나 용도 등 조건에 제한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재산인 경우라도 당초의 행정용도 이외의 용도와 복합하여 개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 또한 위탁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행정 목적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라도 일반재산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¹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미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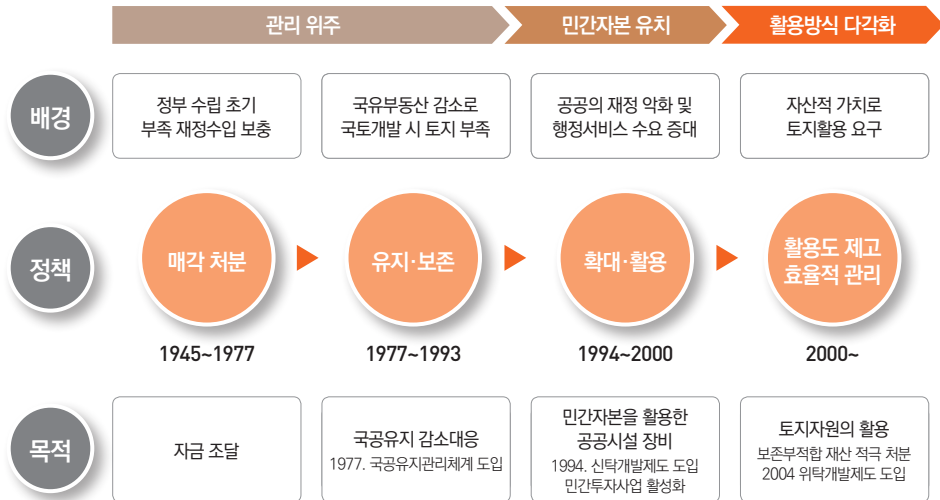
한편, 국유재산 관리 정책은 국가의 재정적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변화·발전되어 왔다. 정부 수립 초기에는 부족한 재정적 수입을 보충하기 위하여 매각과 처분을 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으며 이를 통해 부족한 국가의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매각과 처분 중심의 정책으로 국유부동산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고 결국 국토개발 시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77년 국·공유지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유지와 보존을 제1의 정책으로 하게 되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공의 재정악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공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1994년 신탁개발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최근에는 점차 활용방식을 다각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위탁개발사업과 같이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간의 자본을 더욱 적극적이면서도 안정적 구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¹ 위탁개발사업은 위탁관리가 가능한 일반재산에만 한정되며 위탁개발을 통해 개발된 시설물도 일반재산으로 위탁관리한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편람에 따르면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개발이 필요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한 경우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위탁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2014) p.112. 참고).

그림.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자료: 서울시(2014). 자산이 미래다 p.22, 국유재산 관리정책 변화 참조 재작성

국유재산 정보관리 현황 및 문제점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그동안 업무 담당자들은 단순하게는 국유재산의 위치 파악이나, 텍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정보 작성을 위주로 하다가 이후 실제 국유재산의 존재여부 확인 등을 위해 민간에서 제공되는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에서 공간정보를 수집하여 업무에 활용하였으나, 많은 시간과 제한적인 정보수집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구축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유재산업무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으로서의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 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시스템을 2012년부터 구축하여 2016년부터 활용하게 되었다.² 한편 국유재산과 관련된 법은 다르지만 정의나 범위 등의 내용이 유사한 공유재산 정보관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

² 윤정수 외, 「e나라재산시스템을 활용한 공간정보기반의 효율적 국유재산관리」, 한국재정정보원, 2018.11.



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유재산의 정보관리도 행정안전부의 시도·시군구(서울)행정정보시스템과 행정공간정보시스템,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하에 있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보급 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시스템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 행정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서 토지재산만 추출하여 공간정보기반으로 구축한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 강원도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지자체별 자체 시스템 개발은 더욱 활발해지기 시작해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은 국가차원, 지방자치단체차원 혹은 중앙부처 간에도 관리주체와 목적에 따라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많은 경우 이 시스템은 주로 해당기관의 재산관리 등의 행정목적을 위해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 간 혹은 공공-민간 등 해당기관 외부에서는 접근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공간적으로 유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토지자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연계해서 파악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본적인 국가의 국유재산 관리정책은 도시재생 등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토지자원의 활용제고와 효율적 관리 방향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점점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와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생소한 공공시





설의 등장 등 스마트시대의 혁신을 배경으로 한 사회여건 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매우 직접적이고 다층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공공토지자원 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신속하게 적정부지를 찾고, 효율적으로 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유재산 정보관리시스템은 국가 단위, 행정단위, 업무단위 등에 따라 별도 관리·운영되거나, 공간단위에서도 파편화되고, 개별적으로 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하겠다.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며 등장한 스마트시대는 우리의 삶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많은 시도와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이것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면 'ICT기술을 접목시킨 물리적인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는 방식',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시 문제에 대한 스마트한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 '도시문제의 당사자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과 실천까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스마트 시대, 국유재산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방향으로서의 공공토지자원 활용시스템의 구축 목표는 '도시에 대해 스마트한 진단과 해법에 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즉, 앞서 언급하였듯이 공공서비스가 세분화되고 다양화되면서 ‘반려동물교육센터’같은 과거에는 생소했던 공공시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 증가는 이를 공급할 수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유재산을 포함한 국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는 여러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어 업무 수행에 많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하고 있듯이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 내에 스마트하게 통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새울행정시스템 내 공유재산정보시스템뿐 아니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지적행정시스템, 세외수입시스템, 디브레인(dBrain), e나라 재산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되도록 구축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함께, 민간의 인터넷포털과 항공영상 지도 서비스까지 연계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 내 데이터는 실시간 또는 주기적으로 속성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통합데이터베이스에 가공·적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 스마트시대 국유재산의 활용방향은 체계적인 국유재산의 관리와 유희 국유재산 등의 활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단위, 지역단위, 공간단위의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파편화·개별화되어 있는 많은 토지정보가 통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툇아보다: 살살이 훑어 나가면서 살피다



국유재산의 현황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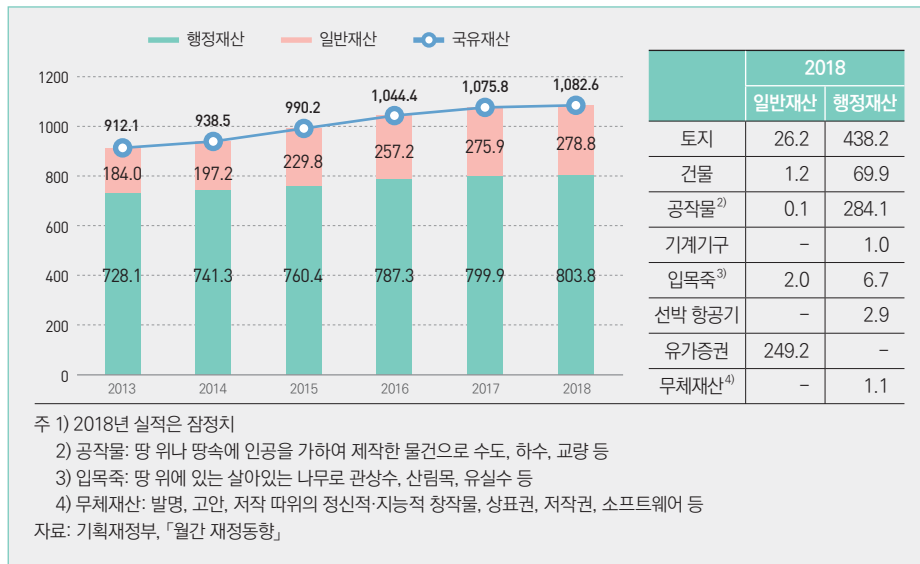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으로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 선박, 항공기, 기계와 기구, 전세권, 광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1. 국유재산 현황

- 국유재산은 '18년 기준 약 1,083조 원(현재액 기준)에 달하며 국유재산의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유재산 중 토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국유재산은 정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의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산은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국유재산인 일반재산은 '18년 기준 약 279조 원이며, 그 중 상당수는 유가증권(249조 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는 금액으로 약 26조 원의 가치를 지님

표 1. 국유재산 현황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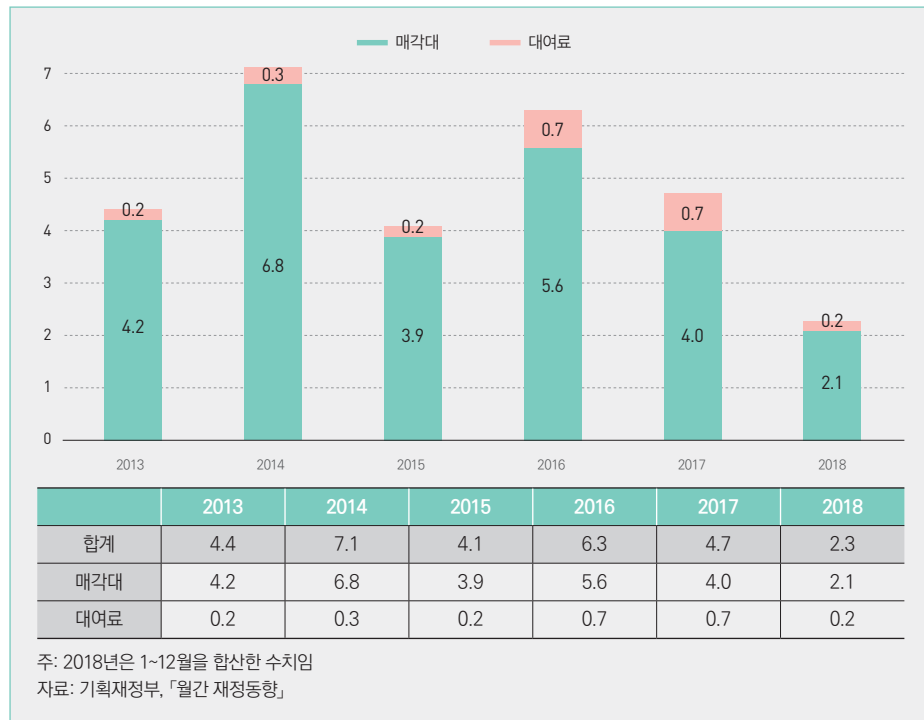
2. 국유재산의 활용

□ 국유재산의 수입은 일반재산의 토지나 무형재산을 매각·대여하여 발생하게 되며, 이 외에도 국유재산의 무단이용·점유 등에 대한 변상금에서 발생

□ 국유재산의 매각·대여를 통해 '18년 기준 2.3조의 수입 발생, 수입의 대부분은 현재 매각을 통해 얻고 있으나 '18년 기준 대여료 또한 0.2조 원으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

표 2. 국유재산의 매각·대여료 수입

(단위: 조 원)



□ 정부는 국유재산 중 국유지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국유재산 총조사'를 수행하여 유휴 행정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개발 사업 등에 활용하여 재정확보의 보조수단 외에도 경제협력 제고에 활용

○ '19년 기준 10.5만 필지(여의도 면적 25.5배)의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개발·대부·매각 등을 추진할 계획

숫자로 보는 나라재정

1. 최근 재정통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2019년 1월 중 총수입은 51.4조 원, 총지출은 44.5조 원이다. 2019년 1월까지의 총수입 진도율¹은 10.8%이고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증가(진도율 0.6%p 하락)하였다. 2019년 1월까지의 총지출 진도율²은 9.5%이고 전년 동기 대비 8.7조 원 증가(진도율 1.2%p 상승)하였다.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 원, %)

	2018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총수입 (진도율)	50.8 11.3%	77.4	121.2	169.9	214.0	243.8	291.9	327.1	359.2	403.3	432.7	-	51.4 10.8%
총지출 (진도율)	35.8 8.3%	76.5	122.9	169.6	205.3	247.3	282.7	311.1	345.2	374.6	395.3	-	44.5 9.5%
통합재정수지	15.0	0.9	-1.8	0.2	8.7	-3.5	9.8	16.0	14.0	28.7	37.4	-	6.9
사회보장성기금수지	2.5	4.8	8.8	13.8	17.9	22.0	24.7	28.0	31.3	34.3	37.6	-	2.0
관리재정수지	12.6	-3.9	-10.5	-13.6	-9.2	-25.5	-15.5	-12.0	-17.3	-5.7	-0.2	-	4.9

주 1)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2018년 12월 말 실적치는 기금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4월 초)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¹ 총수입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수입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수입 예산은 447.7조 원이며 2019년 총수입 예산은 476.1조 원이다.

² 총지출 진도율은 해당 연도의 총지출 예산 대비 당월 누계 총지출 규모의 비율을 의미한다. 2018년 추경 기준 총지출 예산은 432.7조 원이며 2019년 총지출 예산은 469.6조 원이다.

총수입
51.4조 원

총지출
44.5조 원



2019년 1월 중 국세수입은 37.1조 원(소득세 9.1조 원, 부가가치세 17.5조 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까지의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는 3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감소하였다.

국세수입(일반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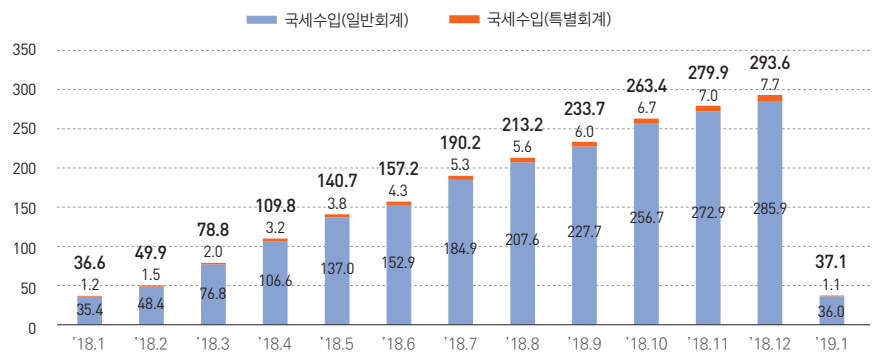
36.0조 원

국세수입(특별회계)

1.1조 원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 원)



주 1)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2018년 12월 말 실적치는 기금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4월 초)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2019년 1월의 통합재정수지는 6.9조 원 흑자이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2.0조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9조 원 흑자다. 전년 동기 대비 통합재정수지는 8.2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7.7조 원 악화되었다.

통합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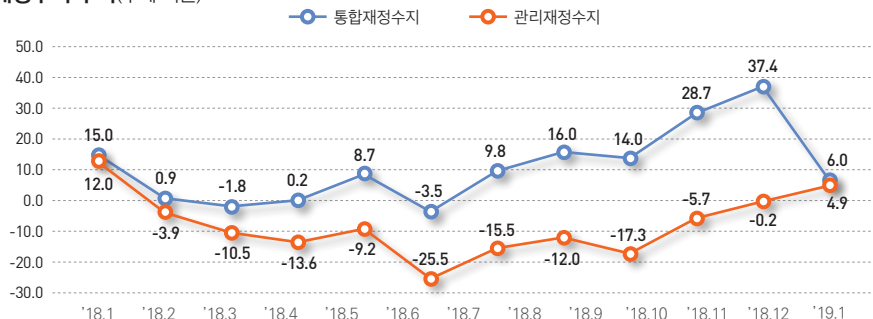
6.9조 원

관리재정수지

4.9조 원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단위: 조 원)



주: 2018년 12월 말 재정수지 실적치는 기금 결산 후 취합·분석을 거쳐 국가결산 발표 시(4월 초) 공개할 예정임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a.go.kr)



주요 관리대상사업

2019년도 주요 관리대상사업³ 중 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앙부처의 1월 말 기준 누적 집행액은 27.4조 원으로, 연간 계획(250.5조 원) 대비 11.0%를 집행하였다. 이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는 24.2조 원(연간 계획 대비 11.7%), 40개 기금에서는 3.2조 원(연간 계획 대비 7.4%)을 집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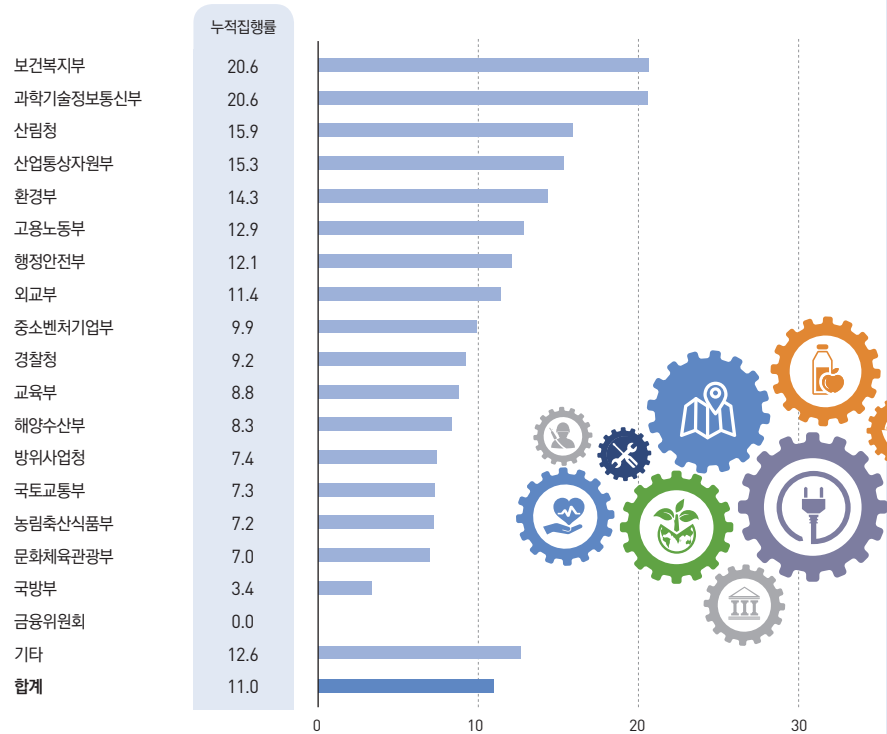
1월 말까지의 주요 소관별 집행률은 보건복지부(20.6%),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6%), 산림청(15.9%), 산업통상자원부(15.3%) 순으로 높으며, 금융위원회(0.0%), 국방부(3.4%), 문화체육관광부(7.0%) 등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누적 집행률

11.0%

주요 관리대상사업 소관별 집행률

(단위: %)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³ 재정집행관리 점검 대상인 45개 중앙행정기관과 40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사업비에 해당된다.



국유재산

2019년 1월 기준 국유재산 현액은 1,079.0조 원으로 전월 대비 3.6조 원 소하였으며, 행정재산⁴ 806.1조 원(전월 대비 2.3조 원 증가), 일반재산⁵ 272.9조 원(전월 대비 5.9조 원 감소)으로 구성된다.

행정재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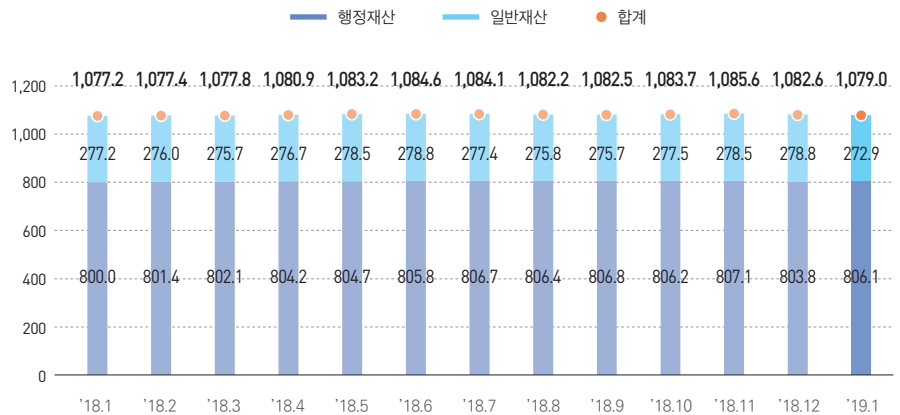
806.1조 원

일반재산

272.9조 원

국유재산 추이

(단위: 조 원)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1월 중 국유재산 취득 총액은 2조 2,893억 원이며 전월 대비 1조 2,435억 원 감소했다. 처분 총액은 2,862억 원이고 전월 대비 4,182억 원 감소하여, 1월 중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2조 31억 원 초과한다.

⁴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청·관사, 도로, 하천 등이 이에 해당된다.

⁵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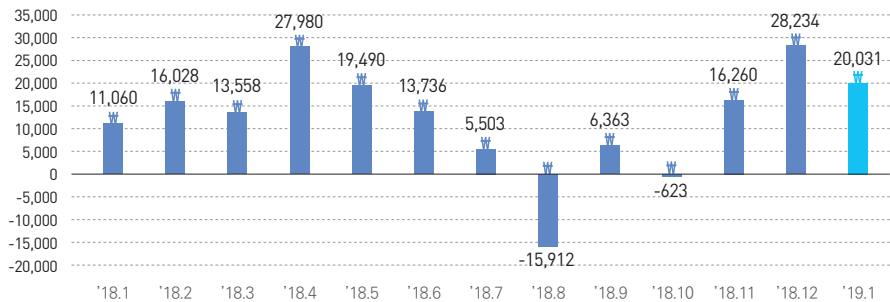
2조 2,893억 원

처분

2,862억 원

국유재산 취득·처분 추이

(단위: 억 원)



	2018년												2019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순취득	11,060	16,028	13,558	27,980	19,490	13,736	5,503	-15,912	6,363	-623	16,260	28,234	20,031
취득 ³⁾	11,460	22,818	14,441	29,944	22,848	16,276	11,776	21,844	11,385	7,972	18,173	35,328	22,893
처분 ⁴⁾	400	6,790	883	1,964	3,358	2,540	6,273	37,756	5,022	8,595	1,913	7,044	2,862

주 1) 2018년, 2019년 자료는 잠정치임

2)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3) 매입, 교환 및 환지, 신규등록 및 무상취득으로 인한 취득

4) 매각, 교환 및 환지, 멸실 및 양여로 인한 처분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국고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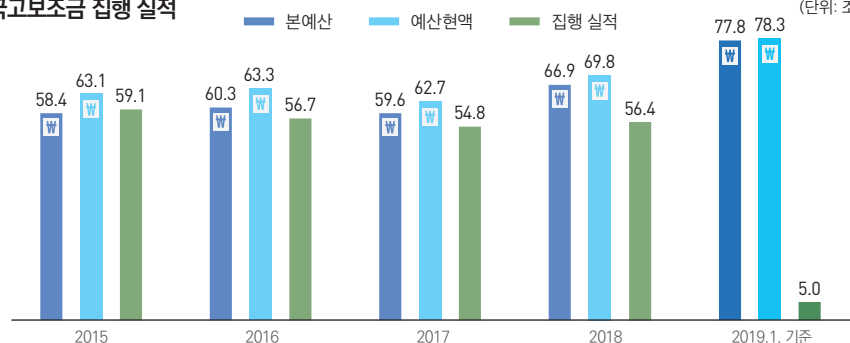
2019년 국고보조금 예산(본예산 기준)은 77.8조 원으로 전년도 예산 66.9조 원에 비해 약 10.9조 원 증가하였다. 2019년 1월 기준으로 예산현액⁶⁾은 78.3조 원이며, 1월 누적 실적행 실적은 5.0조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5% 실적행되었다(1월 누적 교부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12.6%).⁷⁾

1월 누적실집행률

6.5%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단위: 조 원)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분야별로 사회복지 4조 8,058억 원, 보건 634억 원, 농림수산 478억 원, 일반·지방행정 38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1억 원으로 집행되었다. 예산현액 대비 교부액을 나타내는 교부집행률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5.5%로 가장 높지만, 예산현액 대비 집행행액을 나타내는 집행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10.4%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부집행률

45.5%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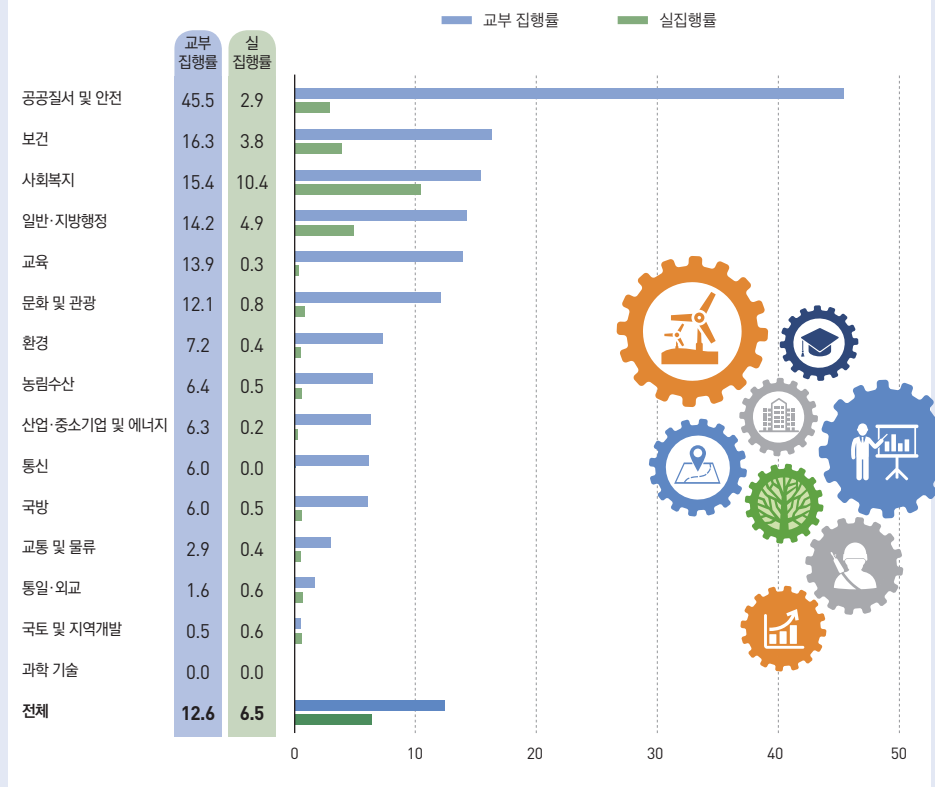
가장 높은 집행행률

10.4%

(사회복지 분야)

분야별 국고보조금 집행률

(단위: %)



주: 2019년 1월 누적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6 전년도 이월액 등이 반영된 예산정보로서 당해 연도 국회 확정 예산액과는 다를 수 있다.

7 교부집행액이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지급한 보조금 규모이며, 집행행액이란 최종 보조사업자까지 전달(이체)된 보조금 규모를 의미한다.



이달의 주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e나라도움)에서 행정·통일·외교 관련 보조사업 중 최근 한 달간 많이 검색된 보조금 사업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 지원,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그 뒤를 잇는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2019년도 기준 78.1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업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사무를 지원하며 527.4억 원이 2019년도 사업비로 편성되었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은 결혼이민자 등 입국초기 외국인의 한국 사회 조기적응을 위해 2019년 12.4억 원이 편성되었다.

주관 부처 :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 사업 목적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 대상 법인
- 보조율 국고보조금 50%, 지자체부담금 50%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78.1억 원

주관 부처 : 법무부

【대한법률공단 법률구조사업 지원】

- 사업 목적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법률구조지원을 하여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
- 지원 대상 전국민(법률상담), 법률구조대상자(민형사소송대리)
- 보조율 정액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527.4억 원

주관 부처 : 법무부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

- 사업 목적 입국초기 외국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지원 대상 국내에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
- 보조율 국고보조금 100%

당해 연도 사업비
(예산 현액)

12.4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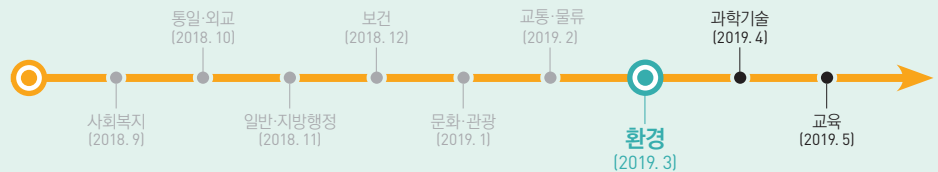
주: 2019년 3월 10일 검색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2. 분야별 통계: 환경 분야

이번 호는 15대 분야(예비비 제외) 중 **환경 분야**의 재정 현황 및 주요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정구조와 추이

2019년 환경 분야의 총지출은 7조 3,972억 원이다. 2018년 총지출 6조 8,984억 원 대비 7.2%(4,988억 원)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게 1.6%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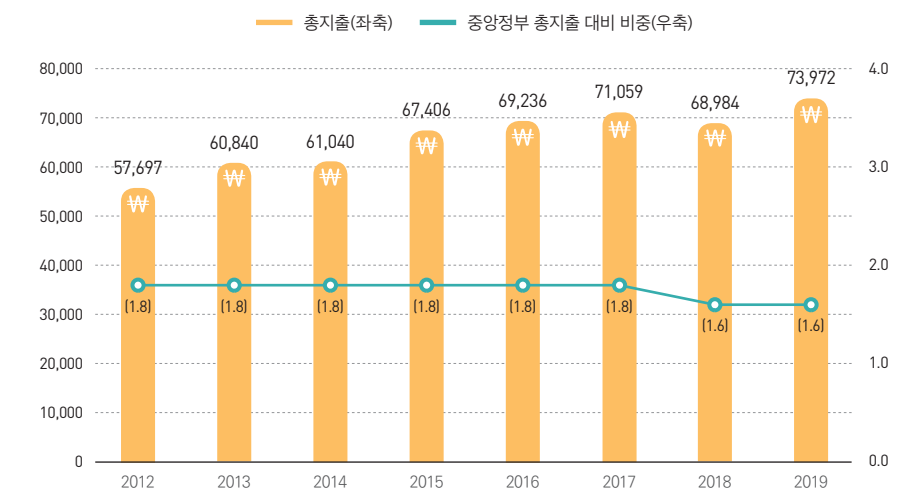
환경 분야의 총지출은 2013년 6조 원을 넘은 이후 2017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8년 소폭 감소한 후 2019년 다시 증가하였다. 환경 분야 총지출이 중앙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부터 소폭 축소되었다.

2019년 본예산

7.4조 원

환경 분야 추이

(단위: 억 원, %)



주: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기금별 재정 현황

2019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는 일반회계 2.6%(1,906억 원), 특별회계 84.6%(6조 2,546억 원), 기금 12.9%(9,520억 원)으로 구성된다. 2019년 기준 특별회계는 환경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으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수산발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6개가 있다.

일반회계

0.2조 원

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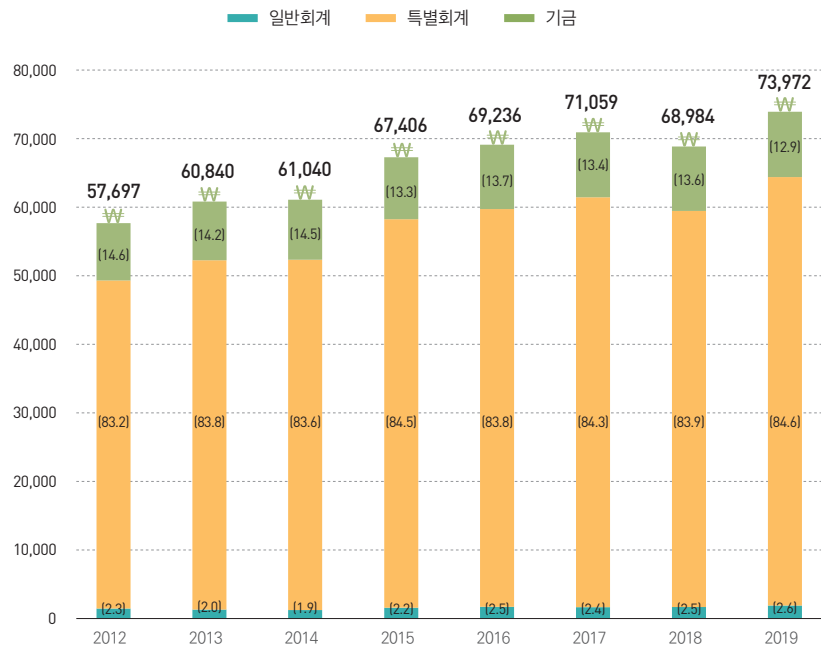
6.3조 원

기금

1.0조 원

환경 분야 회계·기금별 현황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환경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환경 분야 특별회계 예산의 총합은 6조 2,546억 원이다. 환경 개선특별회계가 4조 3,217억 원으로(환경 분야 특별회계 합계 대비 69.1%)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1조 974억 원, 17.5%)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7,677억 원, 1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678억 원, 1.1%)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17년부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대산지방해양수산청)는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4.3조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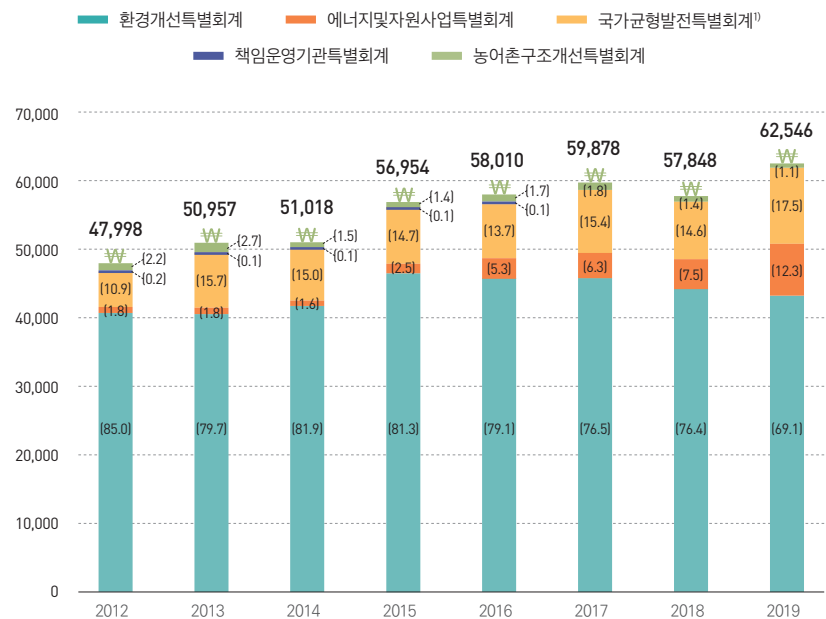
1.1조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8조 원

환경 분야 특별회계 예산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4년까지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지역발전특별회계

2)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3)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환경 분야 특별회계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 확대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에 근거하여 2012년 설치되었다. 환경개선특별회계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가산금·과징금, 수질개선부담금·가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국가환경개선사업,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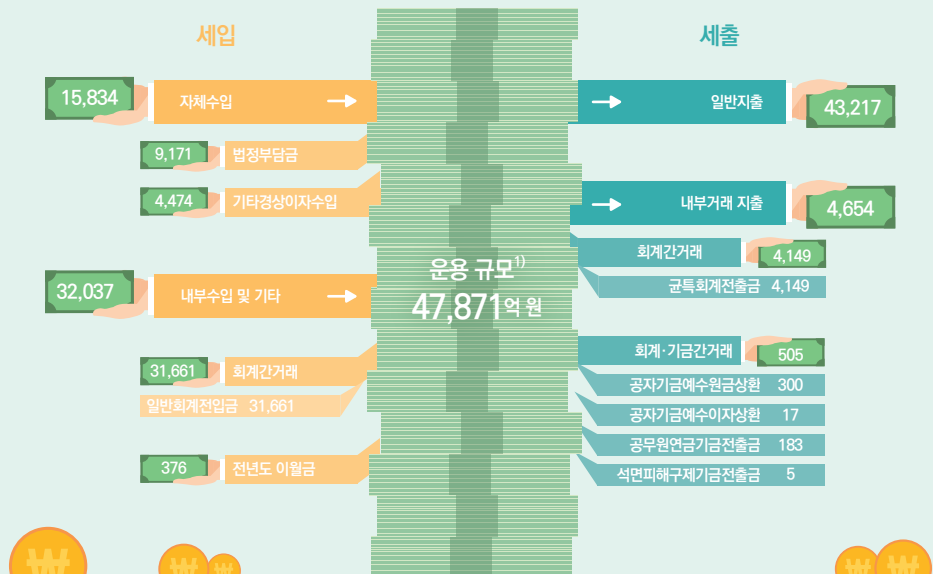
2019년 예산 규모는 총계 기준 4조 7,871억 원으로 수입은 정부출자수입 등의 자체수입 1조 5,834억 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 내부수입 및 기타 3조 2,037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일반지출 4조 3,217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원리금상환 등 내부거래지출 및 기타 4,654억 원으로 구성된다.

특별회계 운용 규모

4.8조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환경 분야 기금 규모의 총합은 9,520억 원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4,656억 원(환경 분야 기금 규모 대비 48.9%)과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425억 원 (25.5%), 금강수계관리기금 1,156억 원(12.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30억 원 (8.7%), 수산발전기금 279억 원(2.9%), 석면피해구제기금 175억 원(1.8%)으로 구성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0.5조 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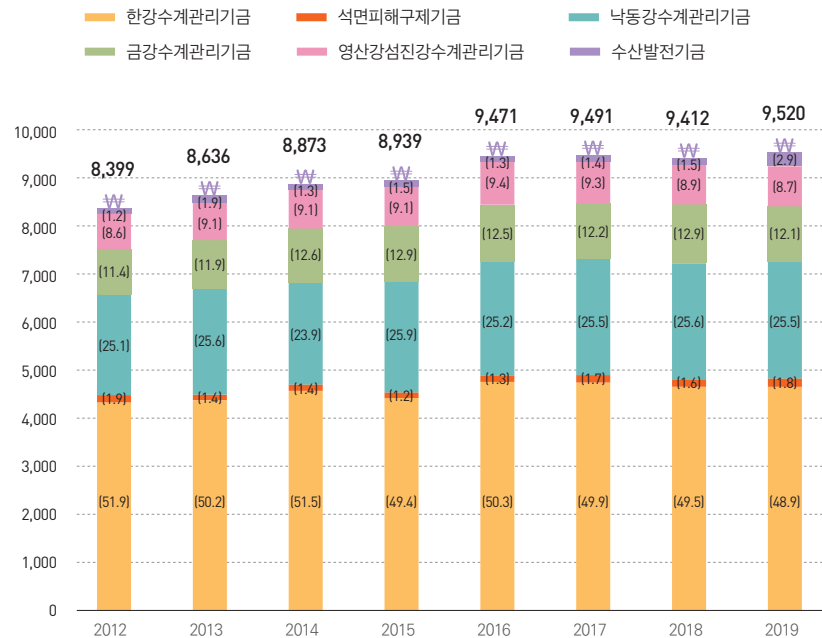
0.2조 원

금강수계관리기금

0.1조 원

환경 분야 기금 운용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환경 분야 기금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999년 설치되었다. 한강수계 관리기금은 물이용 부담금, 매수한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토지 등의 매도 금액,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삼아,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지원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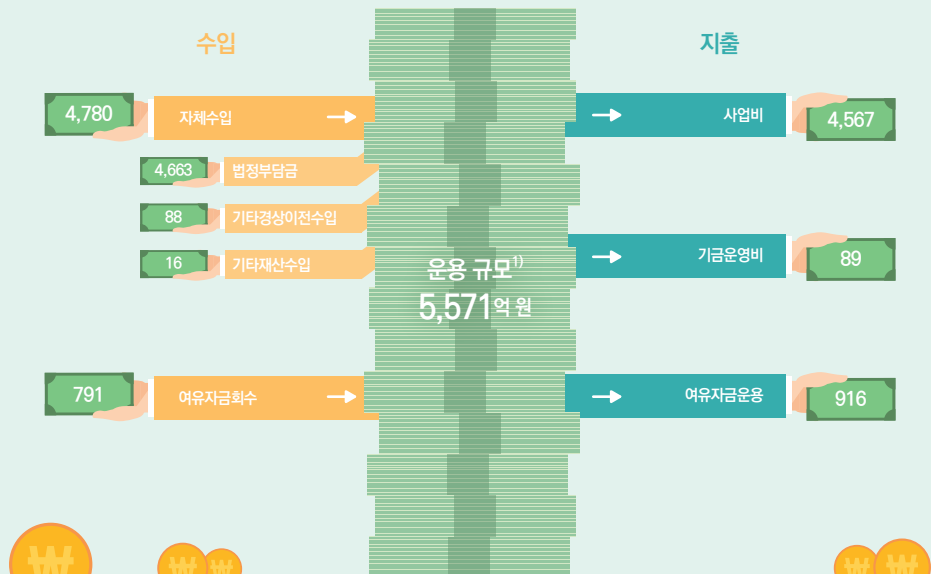
2019년 운용 규모는 총계 기준 5,571억 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 4,780억 원, 여유자금 회수 791억 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 4,567억 원, 기금운영비 89억 원, 여유자금 운용 916억 원으로 구성된다.

기금 운용 규모

0.6조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 구조

(단위: 억 원)



주 1) 총계 기준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부문별 재정 현황

환경 분야는 2019년 기준 물환경,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자연환경, 환경일반, 해양환경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2019년 본예산 기준 환경 분야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부문은 물환경 부문으로 53.3%(3조 9,463억 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부문이 18.7%(1조 3,808억 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부문이 9.1%(6,708억 원)을 차지하며 그 뒤를 잇고 있다.

물환경

3.9조 원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

1.4조 원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

0.7조 원

자연환경

0.6조 원

환경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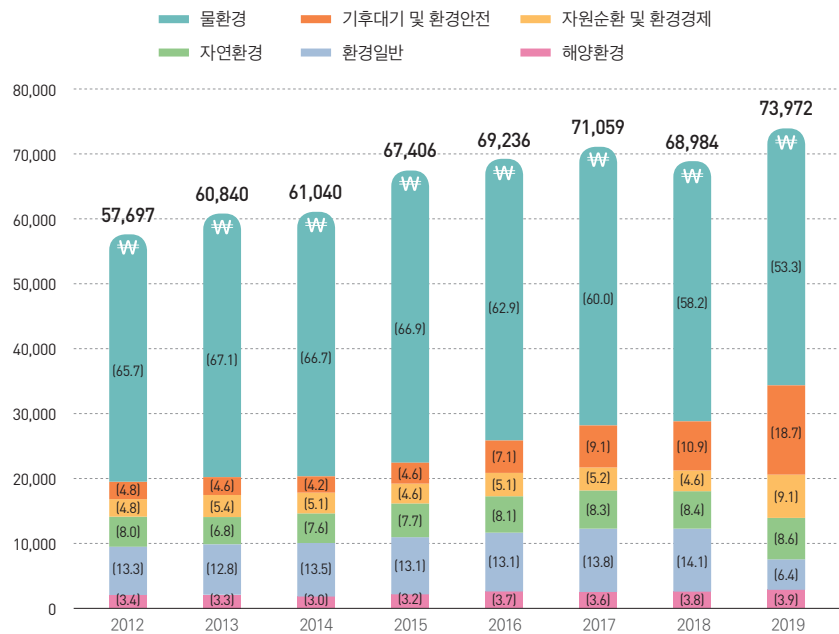
0.5조 원

해양환경

0.3조 원

환경 분야 부문별 추이

(단위: 억 원, %)



주 1) 2017년도까지는 결산, 이후는 본예산, 총지출 기준

2) 괄호 안은 각 회계연도 환경 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019년도 주요 사업

환경 분야의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하수관로정비 사업, 상수도시설확충 및 관리 사업,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용자) 사업 등이 있다.

하수관로 정비 사업

5,993억 원

국민 보건위생 향상,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관거⁸를 정비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는 2019년 5,993억 원을 편성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발생을 예방하고, 하수관거 보급 및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

5,421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고도정수처리 도입, 강변여과수⁹ 개발 등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사업(5,421억 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강변여과수 시설 개발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 급수구역간 무단수 연계관로체계를 구축하여 재난, 가뭄에 대응한다.

⁸ 오수와 우수를 모아 하수처리장과 방류지역까지 운반하기 위한 배수관로를 의미한다.

⁹ 인공적으로 하천 옆에 취수정을 설치해 하천 바닥의 모래층을 뚫고 자연스럽게 여과되도록 한 다음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물이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5,403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5,403억 원)은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확대되었다.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전기차 양산 보급 시점을 앞당길 계획이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

196억 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196억 원)은 물산업 클러스터 시너지 효과 및 자립화를 위해 새로이 편성되었다. 물산업 클러스터란 물산업 기술개발에서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물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자 조성된 시설 및 집적단지를 이른다. 관련 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든 분야를 시험분석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물융합연구소 실험장비 구축 사업이다.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용자) 사업

120억 원

또한 노후 소형유조선 현대화(용자) 사업이 120억 원 규모로 신규편성 되었다. 해양환경 관리법 개정(05. 4. 5)에 따라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2020년부터 이중선저구조¹⁰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영세한 소형유조선 선사에 한해, 선령 30년 이상 소형유조선을 이중선저구조로 대체건조 시 건조비용 일부(50%) 용자해 준다. 이중선저구조의 적용으로 해양사고 발생 시 유류 유출을 예방하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대체건조를 통해 조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

¹⁰ 이중선저구조란 선박 화물창 바닥을 두겹으로 보호하는 구조로, 좌초·노후 등으로 선체 바닥에 구멍이 나더라도 화물창에 적재된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다.



이 달의 이슈 키워드 「교육」

정책여론수렴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 동안 '교육'의 언급량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주요 연관어로 도출되었듯이,
개학시즌을 맞이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연관어

SKY캐슬

고등학교

평생교육

대학교

취업

자녀

개선

대안교육

교육과정

자격증

복지

변화

기획

사교육

유치원

주: 대입제도를 포함하여 검색된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여론수렴시스템(big.pr.go.kr, 2019. 2. 18.)

수집 기간: 2019. 1. 1. ~ 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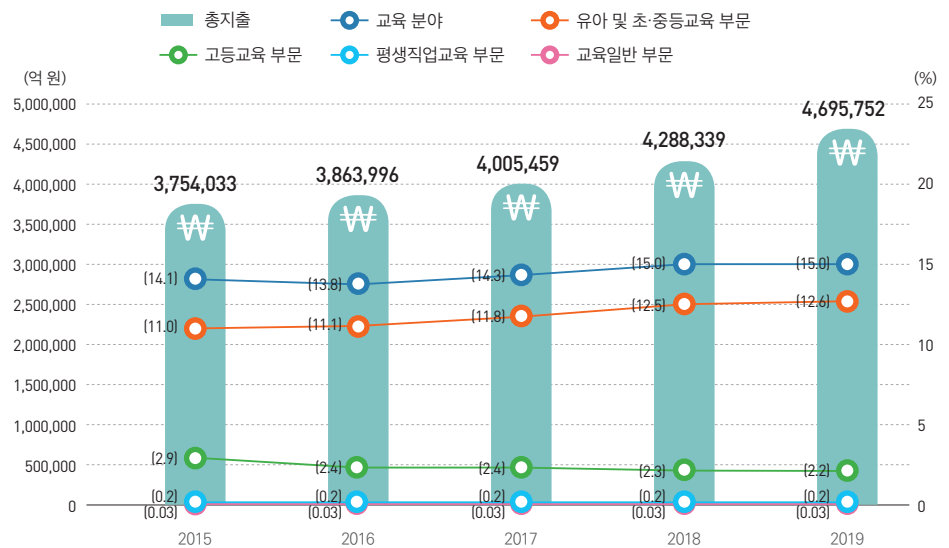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19년 본예산 기준 우리나라 교육 분야 예산은 총지출 469.6조원의 15.0%인 70조 6,490억 원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59조 3,832억 원(총지출 대비 11.8%)으로 교육 분야 예산의 8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조 2,488억 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93.0%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육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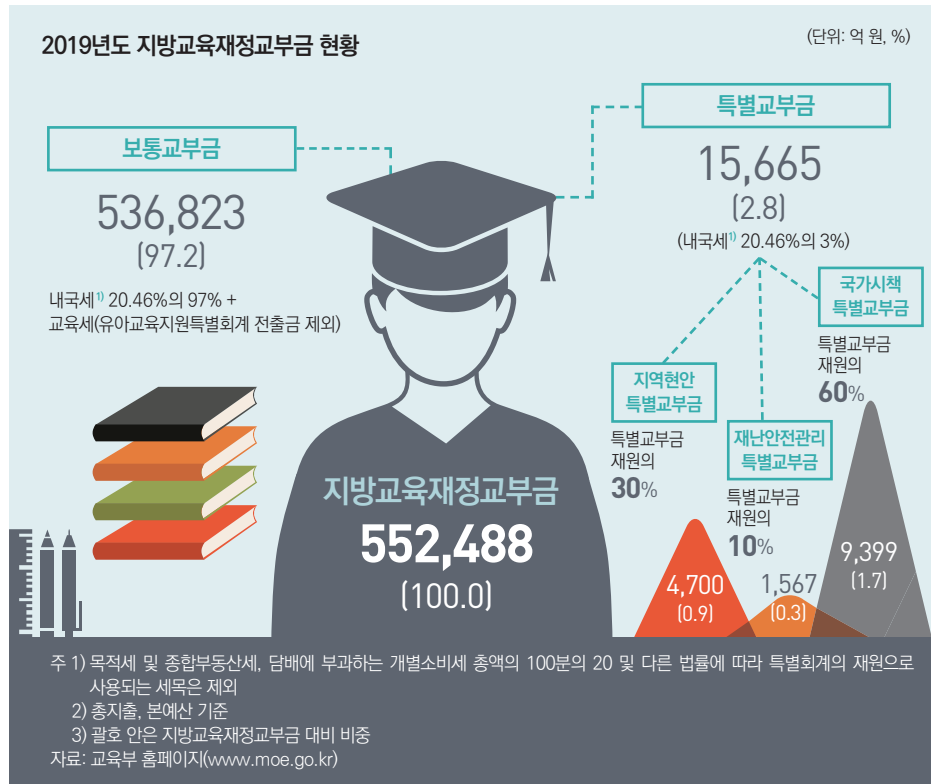


주 1) 총지출, 본예산 기준

2) 괄호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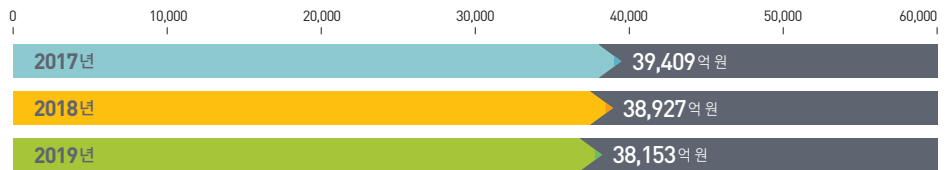
자료: 열린재정(openfiscaldat.go.kr)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예산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20.46%의 97%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교육세의 합으로 2019년 본예산 기준 53조 6,823억 원이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20.46%의 3%인 1조 5,665억 원으로 이 중에서 30%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10%는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60%는 국가시책특별교부금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2017년에 설치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만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의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019년 유아교육특별회계 예산은 3조 8,153억 원으로 2018년 대비 774억 원 감소하였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추이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열린재정(openfiscaldata.go.kr)

2019년 교육 분야 주요사업 소개

2019년 교육 분야 주요사업에는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 장애인학생 교육지원 사업, BK(Brain Korea, 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등이 있다.

2019년 교육 분야 주요사업

(단위: 억 원, %)

	주요사업	규모 
유아 및 초·중등교육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210
	장애인학생 교육지원	104
고등교육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86
	BK21 플러스 사업	2,967
평생직업교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25

주: 총지출, 본예산 기준

자료: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210억 원)은 맞벌이 가정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간 초등돌봄교실 700실을 확충해 나가며,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장애인학생 교육지원 사업(104억 원)은 국립특수학교 운영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특수교육 과정은 의무 교육이며,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립특수학교의 특수교육보조 원 인건비와 방과후학교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지원을 하고 있다.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39,986억 원)을 확대하였다. 과학기술, 인문, 예체능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국가우수장학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취약계층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는 소득연계형국가장학금과 같이 다양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학비 부담 경감과 더불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BK21 플러스 사업(2,967억 원)도 지속추진한다.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육성하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25억 원)은 만 25세 이상 취약계층의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1인당 연간 35만 원 내에서, 학력취득교육(학점은행 등) 또는 학력취득 목적 외 교육(평생학습관)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U의 경제전망과 재정지속가능성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프랑스의 정치적 불안, 이탈리아의 과도한 채무-저성장 등은 EU의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¹가 연 4회 발행하는 경제전망을 통해 EU가 직면한 리스크와 경제전망을 살펴보고, 이와 함께 EU 집행위가 3년마다 발간하는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²를 통해 EU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정우 재정정보분석본부 연구원(jungwoo1088@kpfis.kr)

경제전망

EU집행위는 2019년 가을 경제전망에서 EU(28개국)의 경제성장률을 2019년 1.5%, 2020년 1.7%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전망은 2018년 가을 전망 대비 각각 0.4%p, 0.1%p 하향 조정된 결과이다.

이는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무역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제조업 생산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EU 내 무역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유럽 내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과 일부 회원국의 사회적 갈등, 금융 부실에 따른 재정정책의 불확실성 등이 재정전망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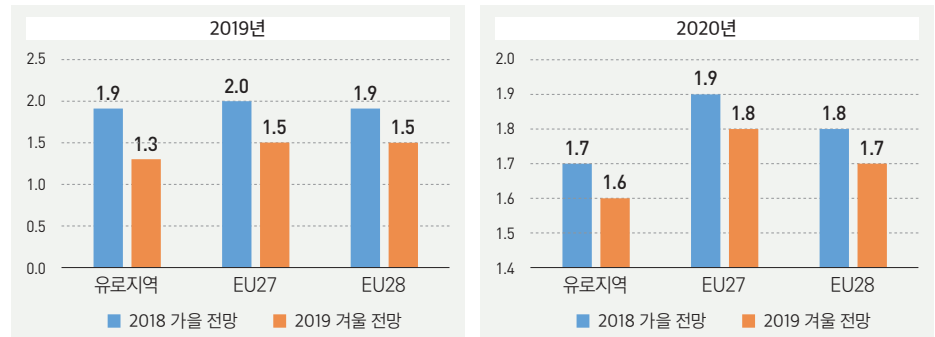
하지만 EU집행위는 EU경제의 성장세는 비록 완만하지만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에는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을 통한 내수 강화, 확장적인 재정정책의 기초, EU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추가 투자 유발과 낮은 수준의 조달 비용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¹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9(Interim)」, 2019. 2. 7.

² European Commission, 「Fiscal Sustainability Report 2018」, 2019. 1. 18.



그림 1. EU국가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국가별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독일은 2019년 1.1%, 2020년 1.7%의 경제성장이 전망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대외 무역 및 투자의 악화와 소비자신뢰 수준 악화, 재정부양책의 한계 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은 2019년 1.3%, 2020년 1.5%로 전망되며, 이에는 개인소비지출의 회복,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낮은 소비자 신뢰수준, 국제무역의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 등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었다.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로 지목되었던 이탈리아는 2019년 0.2%, 2020년 0.8%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민간부문의 부정적인 투자전망과 은퇴연령 하향, 기본소득 제공 등을 추진하는 이탈리아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주요 무역국의 경제침체가 작용하였다. 반면 이탈리아와 함께 재정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는 2019년 2.2%, 2020년 2.3%의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속적인 수출 개선과 함께 고용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소비신뢰수준은 경제위기 전으로 회복되고 있어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다.

EU탈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은 2019년 1.3%, 2020년 1.3%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는 브렉시트로 인한 EU와 영국 간 무역에 대한 불확실성이 자리잡고 있다.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 여건의 악화와 침체된 산업 투자 여건 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공공투자의 증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였다.

재정지속가능성

재정지속가능성에 대한 EU의 평가

재정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은 일반적으로 ‘정부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여

표 1. EU국가 및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2019 겨울)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명	2018년	2019년	2020년
벨기에	1.4	1.3	1.2	슬로베니아	4.4	3.1	2.8
독일	1.5	1.1	1.7	핀란드	2.5	1.9	1.7
에스토니아	3.5	2.7	2.4	유로지역	1.9	1.3	1.6
아일랜드	6.8	4.1	3.7	불가리아	3.2	3.6	3.6
그리스	2.0	2.2	2.3	체코	2.9	2.9	2.7
스페인	2.5	2.1	1.9	덴마크	0.8	1.6	1.3
프랑스	1.5	1.3	1.5	크로아티아	2.8	2.7	2.6
이탈리아	1.0	0.2	0.8	헝가리	4.8	3.4	2.6
키프로스	3.8	3.3	2.7	폴란드	5.1	3.5	3.2
라트비아	4.7	3.1	2.6	루마니아	4.0	3.8	3.6
리투아니아	3.6	2.7	2.4	스웨덴	2.2	1.3	1.7
룩셈부르크	3.0	2.5	2.6	EU27	2.1	1.5	1.8
몰타	6.2	5.2	4.6	영국	1.4	1.3	1.3
오스트리아	2.7	1.6	1.6	EU28	1.9	1.5	1.7
포르투갈	2.1	1.7	1.7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 Winter 2019(Interim)」, 2019. 2. 7.

부'를 의미한다. 즉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혹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재정능력을 의미한다. 재정지속가능성은 신흥 개발도상국 등에 국한되어 중요한 개념이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선진국에서도 재정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기초하에 EU 집행위원회는 3년마다 재정지속가능성 보고서(Fiscal Sustainability Report)를 통해 EU국가의 재정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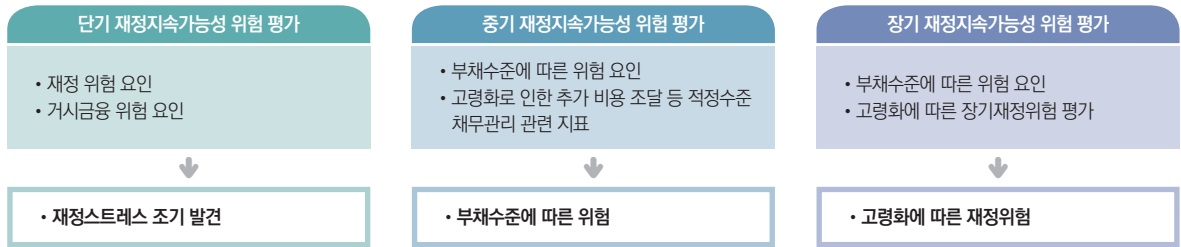
재정지속가능성 평가는 EU의 경제전망, '고령화 보고서(Aging Report)'의 인구전망 등을 기초로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단기 평가에서는 재정 스트레스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재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거시금융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중기 평가에서는 부채수준에 따른 위험을 평가하는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 조달 등 중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채무 관리와 관련되는 지표들을 통해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평가는 고령화에 따른 재정위험을 평가하며 이는 고령화로 인한 추가 비용의 조달과 장기적인 채무안정화와 관련되는 지표들을 평가에 사용한다. 이 외에도 연금 지출, 자산, 부채수준, 우발부채, 현재 세율수준, 기초수지 등 재정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도 평가에 고려된다.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재정지속가능성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적 관점에서 재정 스트레스는 2009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기 위험평가에서 고위험으로 평가된 키프로



그림 2.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스를 제외하면 모든 국가가 저위험으로 평가되었다. 키프로스는 정부의 금융업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증가와 거시금융의 취약성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다만 재정수지의 흑자를 통한 부채 감축이 이어지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채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기 재정안전성 평가에서는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 등 7개 국가가 고위험 국가로 평가되었다. 이들 국가는 재정상황의 악화가 전망되거나, 부정적 경제 충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아직도 채무비율이 높은 점 등이 평가에 고려되었다. 중위험 국가 중 키프로스는 2029년까지 채무비율이 60%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된 점이 중기 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슬로베니아는 채무수준은 낮으나 고령화에 따른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점이 중기 재정안전성 평가에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장기 위험요인 평가에서는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룩셈부르크, 헝가리, 영국 등 6개국 이 고위험 국가로 평가되었다. 고령화에 따른 비용 증가는 인해 벨기에, 헝가리, 영국 등의 평가에 고려되었으며,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재정상황의 악화 등이 장기적인 재정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룩셈부르크는 낮은 채무수준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점이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었다.

표 2. 국가별 재정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중위험	고위험
단기		키프로스
중기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영국
장기	체코, 아일랜드, 프랑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벨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영국

공공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

| 2018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자 인터뷰 |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기여자에게 그 성과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제도’.
공공부문의 효율성 향상에 큰 성과를 거둔 것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과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한 제안자와 더불어 예산낭비 신고자와
예산낭비방지 관련 제안자도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특별한 노력으로 지출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2018년도 상반기 예산성과금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글. 정재림 사진. 고인순

국토교통부 김미희 주무관의 제안

터널전광표지판에
교통정보를 추가한
교통정보전광판 설치비
절감 사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 지역의 국도를 담당하여 도로건설 시 도로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 김미희 주무관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할 당시 지능형 교통체계(ITS¹) 업무를 담당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도로의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통신망을 통해 지방청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전달된 데이터는 전광판에 표시되어 도로 이용자에게 지역별, 구간별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원활한 도로 이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미희 주무관은 일반도로에 설치된 교통정보전광판(VMS²)과 터널 앞에 설치된 터널전광표지판(VMS)이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두 전광판이 모두 도로 이용자에게 전방의 소통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임에도 설치된 위치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 교통정보전광판의 경우 1~5분 단위로 수집된 교통정보를 주요 분기점 전방에서 제공한다. 이는 도로 이용자의 분산을 유도해 지·정체 해소에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반면, 터널전광표지판은 도로보다 피해 규모가 큰 터널 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에 평상시에는 미리 입력해 놓은 단순 홍보문구만을 표

¹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는 전자, 정보, 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접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의미한다.

² VMS(Variable Message Sign)는 도로 이용자에게 전방의 소통, 돌발(사고, 공사, 기상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장비를 말한다.



출하는 것에 그친다.

김미희 주무관은 이러한 장비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절감을 진행했다. 도로전광판 설치가 필요한 지점 인근에 터널전광판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터널전광표지판에 교통정보를 표출하여 ITS 구축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도 3호선 성남-장호원 구간은 상습 정체구간으로 도로 설계 당시 12대의 도로전광판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도로에 장대터널³이 다수 포함되어 터널전광표지판 7대 또한 설치될 예정이었다. 김미희 주무관은 운영 목적이 다르다고 해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는 전광판 장비가 연달아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방편으로 설치가 예정된 12대의 교통정보전광판 중 7대를 터널전광표지판으로 대체했다. 교통정보전광판과 터널전광표지판은 운영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ITS 구축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터널전광판 본래의 설치 목적인 터널방재 기능을 문제 없이 수행하면서 교통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정보센터에서 터널전광판에 직접 교통정보를 표출하는 방식이 아닌, 터널운영자가 정보 표출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터널 내 사고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교통정보 연계 및 단절이 가능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결과적으로 설치가 예정되었던 12대의 전광판 중 7대의 설치비를 절감하여 해당 공정 예산 대비 60%를 절감할 수 있었다.

김미희 주무관은 “근무하던 기관이 꾸준히 예산성과금을 신청한 경험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절감 비용이 큰 제안은 아니었지만 협업을 이끌어낸 점과 과감하게 비용 절감을 시도한 점, 다른 지방국도관리청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예산성과금과 관련된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공무원들이 예산 절감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³ 장대터널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을 의미한다.

KTV 김인환 팀장의 제안

...

정책 홍보용 육아웹툰
자체 제작을 통한
외주제작비 절감 사례

정부 정책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책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방안이 있을까? 한국정책방송원 KTV는 정부정책방송기관으로 정부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정부 정책을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방송하고 있다. 김인환 팀장은 KTV 온라인콘텐츠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육아 정책을 홍보할 목적으로 육아웹툰 콘텐츠 ‘우리동네 김땅콩’을 기획했다.

정보화 시대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승했지만, 정보가 유익하더라도 정부 정책은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기피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 이에 김인환 팀장은 정부의 육아 정책을 친근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 웹툰 형식을 선택했다. 출산세대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임을 고려하면 웹툰과 애니메이션 등이 출산세대에게 익숙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KTV는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방송국’이란 점 때문에 웹툰 제작과 관련된 전문 인력과 예산, 업무 경험이 전무하였다.

고민 끝에 KTV는 육아정책 홍보를 위한 웹툰 제작 가능 방안을 논의하여 기존 방송편집인력의 재능기부를 통해 자체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외주제작 시에 편당 약 5백만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됐으나 재능기부를 활용한 자체제작으로 제작비를 절감한 것이다.

웹툰 제작은 기획 1인, 구성 1인, 삽화 1인으로 구성되어 내부직원의 실제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다양한 육아 및 출산 지원 정책을 한곳에 모아 쉽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웹툰의 내용에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정책은 물론 국토부 소관의 카시트 정책 등도 포함됐다. 웹툰 ‘우리동네 김땅콩’은 총 33화로 구성되어 연재 결과 네이버의 맘키즈 카테고리에서 70만 명, 각 부처의 페이스북을 통해 29만 명이 조회하는 결과를 낳았다. 네이버 맘키즈 콘텐츠 웹툰 Top 100중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또한 연재 후 3백 페이지의 단행본 약 천 부를 제작하여 보건소 800여 곳에 배포하며 정부 정책 홍보물로서의 역할을 지속



예산성과금제도 참여 Tip!

국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지출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지출이 절약된 경우”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거나,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편성하거나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수입이 증대된 경우”는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 개선 등 특별한 노력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이 늘어난 경우를 말한다.



하고 있다.

웹툰을 제작하는 동안 한 네티즌으로부터 산후우울 증 편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전화를 받는 등 뜻깊은 경험도 했다. 김인환 팀장은 “웹툰 기획을 통해 대국민 홍보물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보람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국민 홍보물 특히 공공기관의 홍보물이 그간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제작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었으

나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예산성과금제도가 좀 더 다양한 분야로 적용되길 바란다”며 “일선 정책 현장에서 예산을 집행할 경우 불용처리는 금기사항으로 절약하여 남길 수 있는 예산도 집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절약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에도 성과금제도로 포함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소견을 전했다.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부터 심사까지의 절차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려면 자체심사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신청된 건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창의성, 노력의 정도, 재정개선효과 및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시기	심사시기	지급시기
1월	2~5월	6월 말
7월	8~11월	12월 말



초과세수는 어디에 쓰이나요?

작년 초과세수는 약 25조 4,000억 원으로 2015년 이후 4년 연속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정부가 그동안 과도한 세금 징수를 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초과세수는 왜 발생할까요? 이번 호에서는 초과세수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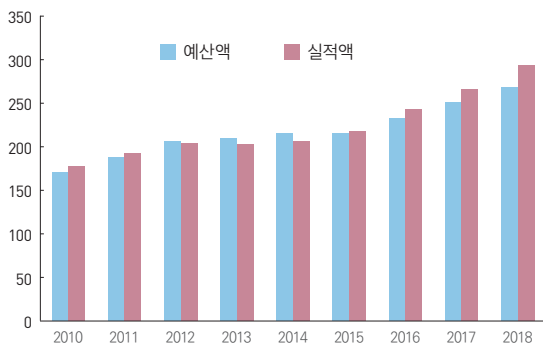
정부는 매년 한 해 동안 재정수입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계획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라 부르고, 이때 재정수입에는 정부가 예상하는 국세수입 규모와 국세외수입, 부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서 국세수입은 조세제도 변경과 향후 국내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측을 하지요. 이렇게 마련된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친 후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되고, '국세수입 예산액'도 확정됩니다.

하지만 국세수입 예산액은 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른 세수추계 오차로 실제 징수한 '국세수입 실적액'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령 정부의 예상보다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의 소득이 낮아지면 소득세가 덜 징수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세수추계 오차는 예산액보다 실적액이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 모두 나타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를 '초과세수', 후자를 '세수결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경우, 정부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우선 정부가 한 해의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하게 되면 초과세수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포함하는 총세입 실적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초과세수로 인해 총세입이 늘어나게 되어 결산 과정에서 총세출을 빼고도 남는 돈, 즉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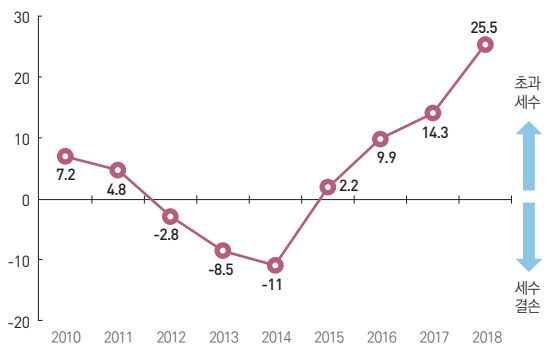
국세수입 예산액 및 실적액

(단위: 조 원)



초과세수 및 세수결손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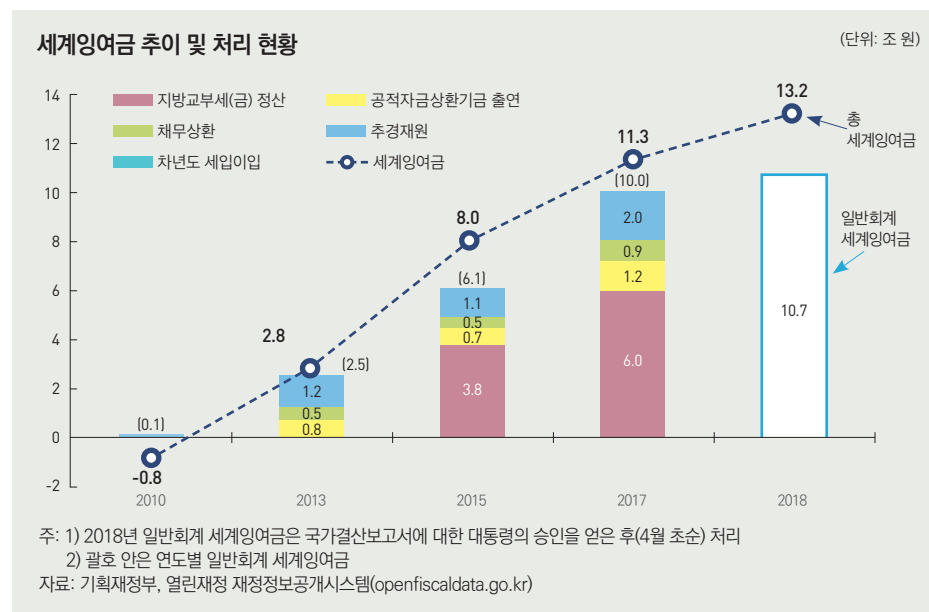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openfiscaldat.go.kr)

세계잉여금이란 한 해 동안 조세수입 등 정부의 총 수입 중 지출하지 못한 금액(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할 금액(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세계잉여금에는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포함되므로 정해진 법률에 근거해 처리합니다. 먼저 세계잉여금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 정산, 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③국가채무 상환, ④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⑤다음 연도 세입이입 순으로 처리됩니다.¹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우리나라의 세계잉여금 및 처리현황을 살펴 보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지난 4년 동안 증가하며, 2018년에는 13.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기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10.0조)은 지방교부세(금)정산(6.0조 원),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1.2조 원), 채무상환(0.9조 원), 추경재원(2.0조 원)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초과세수는 어떻게 발생하고, 처리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호를 통해서 초과세수는 예산안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라는 점, 그리고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해서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률에 따라 국가채무 상환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쓰인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¹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①지방교부세(금)정산→②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잔여액의 30% 이상)→③국가채무 상환(잔여액의 30% 이상)→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또는 다음 연도 세입이입 순으로 사용한다.



조선시대의 이자제한법

글. 이성주 『엽기조선왕조실록』 저자, 문화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는 이자제한법(利子制限法)이란 게 있다. 이자의 최고한도를 규정해 부당한 고리(高利)의 이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몇 번의 부침이 있지만, 서민들을 고리대금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거다.

재미난 건 이런 이자제한법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다. 바로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식(利息)은 이자를 의미한다. 이자(利子)란 표현은 조선이 개항하기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개항 이후 일본에 의해 사용됐다). 조선에서 이자를 제한하려 했던 이유가 뭘까? 시작은 임진왜란이었다.

조선의 경제는 임진왜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화폐경제’의 경험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까지 조선의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물물거래였다. 쌀과 면포가 화폐의 역할을 하는 통에 활발한 상



거래가 이루어지긴 어려웠다. 여기에 미비한 교통망까지 겹쳐지면서 상거래 활동이 극히 위축되게 된다. 이러던 것이 임진왜란 난리 통에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면서 ‘상거래 개념’을 조선인들에게 심어주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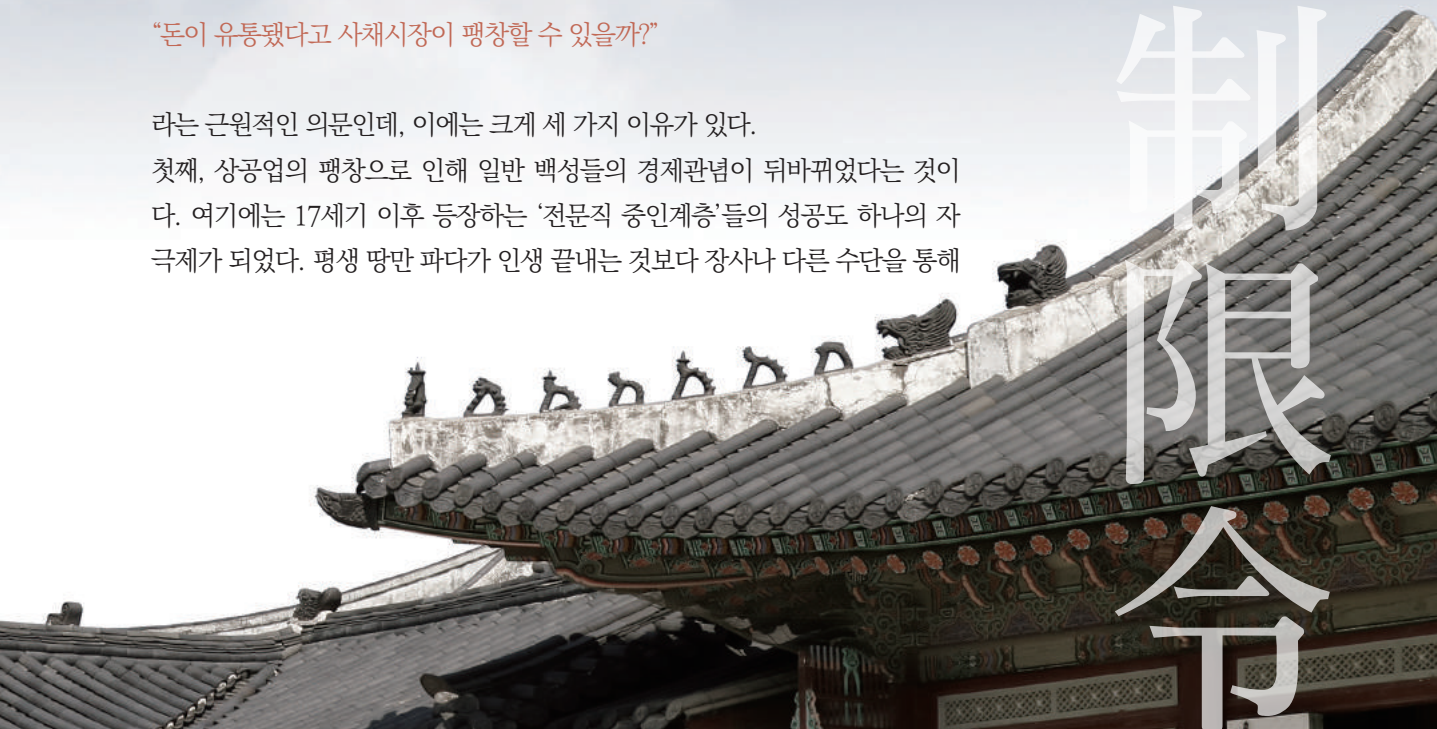
당시 명나라 병사들은 매달 은으로 월급을 받았다. 바로 월량은(月糧銀)이다. 병사 기준으로 한 달에 1.5냥의 은을 받았는데, 이 은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다. 문제는 조선인들은 이때까지 화폐거래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7년간의 전란을 통해 조선인들은 화폐거래의 개념을 알게 됐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게 된다. 전란 전까지는 농업국가의 국민으로 농사와 물물거래만 알고 있었던 조선인들이 새로운 경제관념을 가지게 된다. 바로 ‘장사’였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인조 11년에 만들어진 상평통보(常平通寶)였다. 처음 상평통보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이 엽전을 녹여 그릇이나 생활용품을 만들어 쓸 정도로 화폐에 대한 개념이 낮았지만, 몇 번의 부침을 겪고 나자 상평통보는 ‘돈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이는 조선 사채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의문이 든다.

“돈이 유통됐다고 사채시장이 팽창할 수 있을까?”

라는 근원적인 의문인데, 이에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상공업의 팽창으로 인해 일반 백성들의 경제관념이 뒤바뀌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7세기 이후 등장하는 ‘전문직 증인계층’들의 성공도 하나의 자극제가 되었다. 평생 땅만 파다가 인생 끝내는 것보다 장사나 다른 수단을 통해

利息制限令



재미난 건 이런 **이자 제한법**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는 거다.
바로 **이식제한령 (利息制限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식(利息)**은 이자를 의미한다. 조선에서 이자를 제한하려 했던 **이유**가 뭘까? 시작은 **임진왜란**이었다.

서 '인생 한 방'을 꿈꿀 수 있게 된 것이다.

둘째,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부분이다. 화폐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장리 사업에 뛰어들려면 상당량의 '쌀'이나 '면포'를 확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고나 운송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했다. 그래야지만 쌀을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 쌀이란 화폐는 매년 10% 정도 유실된다는 조건까지 달려 있었다. 이리다 보니 어지간한 재력가가 아닌 이상은 장리사업을 벌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상평통보의 등장은 이런 번거로운 제약조건을 일거에 날려버렸다. 구리로 만들어졌기에 녹슬 걱정도 없고, 쥐가 파먹을 걱정도 없었다. 게다가 가볍고 휴대가 용이하기 때문에 큰 창고 같은 게 필요치 않았다. 일반인이라도 밀천만 조금 있다면 바로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셋째, 수요의 확대였다. 상공업의 발달과 화폐의 유통으로 돈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얘기다.

이렇게 사채시장이 팽창하다 보니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건 순식간이었다. 이제 조선에서는 연 5할 이자가 기본이 됐다. 사태의 심각성은 당시 상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략) 대체로 전화(錢貨)가 행해지면서부터 풍속이 날로 경박해지고 물가가 날마다 뛰어올라 심지어 나물 캐는 할미와 소금 굽는 아이도 모두 곡식을 버리고 돈을 구하려 합니다. (중략) 부자집에서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빌려주는데, 춘궁기(春窮期)에는 1백 전(錢)의 빚을 내어야 겨우 쌀 한 말의 식량을 얻을 수 있지만, 가을에 이르러서는 몇 말의 쌀을 가져야 겨우 1백 전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 갑리(甲利)까지 논한다면 빌려 준 것은 한 말인데 갚는 것은 예닐곱 말에 이릅니다. 만약 곡식으로 빌려 주고 곡식으로 갚게 한다면, 이식(利息)이 갑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외(中外)의 백성들이 모두 그것을 헐파하도록 원합니다. 지금 비록 이미 만든 돈을 녹여 버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까닭 없이 더 만들어 그 무궁한 폐단을 더 보태려 하니까?(하략)”

- 숙종 44년(1718년) 윤8월 3일 정언 유복명의 상소 내용 중 발췌

유복명의 당시 주장은 지금까지 찍어낸 돈을 어찌할 순 없지만, 시장의 요구에 따라 화폐를 더 찍어내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돈이 주는 이





로움은 알겠으나, 그 덕분에 가지지 못한 백성들이 더욱 더
피폐해져 간다는 논리. 맞는 말이었으나, 선불리 이를 받아들이
기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자율은 계속 뛰어올랐고,
덩달아 물가도 뛰어올랐다. 서민들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간파한 숙종은 이식제한령(利息制限令)을 선포한다.

“앞으로 그 어떤 화폐로도 이자율은 연 2할을 넘길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란, 쌀, 배, 상평통보 모두를 가리켰다. 연 평균 5할의 이자를
말하던 조선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강력한 규제라 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숙종
의 이식제한령이 먹히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자 사채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5할 이자가 다시 성행하자 숙종은 두 번째 이식제한령을 내린다.

“앞으로는 어떤 이자를 막론하고 1년 이상 이자를 못 받는다.”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돈을 빌리는 사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장리사업을 압박하는 수단도 되었다. 1년 이상 이자를 받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자들만 시장에 남으라는 신호였다. 그
러나 왕명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의 욕망이었다. 조선시대의 가장 확실한 재테크
크인 장리(長利)를 포기할 수 없었던 조선인들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이자놀이를
계속했다. 물론, 이자율은 연평균 5할대가 기준이었다.



때는 16세기 초. 교황이 유럽 지역에서 자금이 가장 풍부한 지역인 프랑스와 영국의 추기경을 불러 이렇게 얘기한다. “그대들은 한 시간 안에 3t의 황금을 모을 수 있는가.” 추기경들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시골동네인 아우구스부르크의 일개 시민도 하는 일을 부국의 추기경들이 하지 못하는가”라는 면박이 돌아온다. 16세기 유럽에서 회자되던 ‘카더라’ 통신의 한 대목이다. 여기서 ‘아우구스부르크의 한 시민’으로 불린 이가 바로 16세기 유럽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대상인 야콥 푸거다. 당시 유럽대륙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제국을 엮는 ‘황금실(golden thread)’로 불렸던 인물. 독일지역에서 거두어진 ‘면죄부’의 판매대금을 로마로 송금하는 유통 업무를 담당했던 이 초기 자본주의의 대표적 기업가는 ‘정경유착의 원조’이자 유럽 주요국의 재정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었다.

15세기 말 16세기 초 막대한 부를 쌓은 야콥 푸거의 위세는 대단했다. 이 독일 남부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은 북으로는 스칸디나비아, 남으로는 나폴리, 서로는 잉글랜드와 에스파냐, 동으로는 헝가리와 폴란드에 이

Jakob Fugger

유럽 황제들의 재정을 좌지우지한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

글. 김동욱(kimdw@hankyung.com)



르는 전 유럽 지역에 푸거가(家) 지점망을 갖추고 은과 동, 화폐와 직물 등의 거래를 사실상 독점했다.

야콥 푸거에 필적할 만한 상인은 유럽 내에 존재하지 않았고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50년간 합스부르크가가 그들의 영향력 확장을 위해 유럽 내에서 행한 많은 협상과 전쟁의 배후에는 푸거가문의 자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럽의 상인들과 일반 여행자는 물론 공공기관, 도시국가 관계자, 영주들, 교황청 모두 유럽 전역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야콥 푸거의 지점들을 활용해 금전거래와 물자거래를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에스파냐로 간 독일의 광산업자들은 에스파냐 소재 푸거가의 지점을 통해 멀리 있는 친척에게 송금했다. 16세기 초 여행자들은 다른 지역의 푸거가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푸거가의 신용장을 미리 사놓곤 했다.

퍼스티언 천 거래로 일어난 아우구스부르크의 대상인 가문인 푸거가문의 지도권을 1490년대에 잡게 된 야콥 푸거는 자신의 전임자들이 주력했던 천과 향신료 교역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광산업과 금융업이라는 '신수종 사업'에 집중한다. 1525년이 되면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칼 5세가 "야콥 푸거는 다른 모든 상업적 행위를 포기하고 광산업에만 몰두"했다고 평할 정도가 됐다.

특히 헝가리와 티롤 지방의 광산이 야콥 푸거의 관심을 끌었다. 합스부르크 가문이 장악하고 있던 16세기의 이 두 광산은 에스파냐가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귀금속을 대량으로 수입하기 전까지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서도 금과 은의 최대 생산지였다. 연간 100kg의 금과 10t의 은이 생산되던 이 광산들은 신대륙 광산 개발 이전 시기에 전 세계 금생산량의 33%와 유럽 은 생산량의 25%를 담당했다.

이곳의 사업을 독점한 야콥 푸거는 초기 유럽 산업의 지존 자리에 올랐다. 광산권의 독점 과정에선 정경유착이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야콥 푸거는 합스부르크가와 의 금융 커넥션을 활성화하면서 광산업 진출을 시도했다. 푸거가는 1487년에 '부유하지만 언제나 돈이 모자랐던' 티롤 공작 지그문트에게 선금을 주고 은과 동을 확보하는 계약을 맺으며 광산업에 발을 들인다. 이후 푸거가는 티롤 지방 공작들에게 일정 금액을 선금으로 지불하고 빌려준 돈과 이자가 완납될 때까지 공작 소유 광산에서 나오는 이득을 취해왔다.

광산업은 오늘날 인식과는 달리 당시에는 고수익 신사업이었다. 역사학자 막스 얀센의 연구에 따르면 푸거가는 성장 초기인 1487~1494년 사이에만도 40만 라인 골드굴덴의 수익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야콥 푸거는 지그문트 사후 그 지역의 지배권을 갖게 된 독일왕이자 후의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되는 합스부르크가 막시밀리안 1세와 사업관계를 이어갔다.

막시밀리안 1세와의 유착관계는 당시까지 티롤지방 합스부르크가 영지로부터 생산되는 은의 구입과 관련한 금융업의 선두주자였던 한스 바움가르트너를 제치는 계기가 된다. 막시밀리안 1세가 바이에른 출신인 바움



가르트너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치상황을 십분 활용해 푸거가의 성장을 유도한 것이다. 결국 야콥 푸거는 1491년에는 티롤 지방 은교역의 우선권을 획득하게 됐다.

푸거가는 1522년 이전에는 티롤 지방의 광산을 사실상 직접 소유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치적 ‘뺨’을 활용해 경쟁자인 마틴 바움가르트너의 파산을 유도해 슈바츠와 라텐베르크, 리엔츠의 중요한 광산권을 획득한 뒤에는 광산업에 직접 관여하게 됐다. 여기에 오스트리아와 잘츠부르크의 은 교역으로 인한 수익도 야콥 푸거의 부를 불려나갔다.

푸거가는 은뿐만 아니라 지그문트 및 막시밀리안 1세와 맺은 티롤 지방 동에 관한 계약과 동 교역을 통해서도 부를 축적해 갔다. 특히 푸거가는 이탈리아 기술자

이자 상인가문인 투르조(투르조 가문과는 이후 이중삼중 결혼정책으로 결합이 강화된다.)와의 협력을 통해 동 의 원광석에서 동을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 수익성을 더욱 높이게 됐다.

여기에 푸거가의 금융업은 광산업과 결합돼 지속적으로 확장되었다. 정경유착의 활용은 헝가리 광산에 진출할 때 더욱 빛났다. 헝가리 카르파티아 산맥 지역은 오스만튀르크와의 접경지대였고 신성로마제국과 적대적 관계를 가진 마자르족 지도자 마티아스 코르비누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독일 자본가들이 자본을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 하지만 범독일과 헝가리 간의 적대관계는 1491년 프레스부르크 화약으로 해소됐고 야콥 푸거는 프레스부르크 화약 직후 헝가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마자르족 헝가리의 독일 상인에 대한 적대감을 합스부르크를 ‘뺨’으로 삼아 극복하며 광산업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합스부르크가가 헝가리 왕실과 이중의 결혼동맹을 맺어 헝가리 내에 합스부르크가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푸거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푸거가의 입지도 굳게 다질 수 있었다.

이 아우구스부르크의 상인은 꾸준한 수익이 창출될 때까지 엄청난 양의 금액을 헝가리 광산과 용해소, 제철소는 물론 광석을 옮길 도로건설 등에 쏟아 부었다.

이후 야콥 푸거의 사업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정치권력과의 독점계약 이었다. 야콥 푸거는 두건의 중요한 동 독점계약을 정치권력과 맺었는데 하나는 1514년에 막시밀리안 1세와 푸거가 독점으로 맺은 것으로 1515년 크리스마스부터 1520년 크리스마스까지 신성로마제국 내 동 독점권을 푸거가가 갖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1520년 크리스마스부터 1523년 크리스마스까지 회히스테터 가문과 공동으로 이 독점권을 소유한다는 것이었다.

야콥 푸거의 정경유착은 정치권력의 대를 이어 계속됐다. 막시밀리안 사후에 야콥 푸거는 그의 후계자인 칼 5세와 독점계약을 맺었다. 1525년 에스파냐 톨레도에서

역사가들은 후대의 로스차일드 가문을 제외한다면 정치세력과 그토록 꾸준하고 효과적인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가문은 푸거가문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칼 5세가 직접 발표한 칙령은 “야콥 푸거와 그의 가문만이 원광석 거래를 합법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금속 독점권을 바탕으로 푸거가는 유럽 경제권을 장악해갔다. 동유럽 지역에서 생산된 푸거가 소유 동은 우선 한자동맹 상인과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 튀베크나 함부르크를 거쳐 네덜란드로 갔다. 이어 앤트워프의 푸거가 지점으로 집결됐다. 다시 앤트워프에서 푸거가의 동은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로 갔다. 물론 혈연동맹을 맺었던 이탈리아 투르조가를 통해 육로로 이탈리아 반도와 남유럽으로도 동이 퍼졌다.

이처럼 야콥 푸거는 신성로마제국 황제를 비롯해 유력한 영주들을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았으며 그가 죽기 몇 주 전 까지도 여러 영주에게 선물과 뇌물을 사용하면서 협상과 청탁을 계속했다.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황제는 야콥 푸거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으며 헝가리 국왕이 “푸거가가 헝가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표한다면 전 유럽을 헝가리에 대해 적대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꾸짖할 정도였다. 역사가들은 후대의 로스차일드가 문을 제외한다면 정치세력과 그토록 꾸준하고 효과적인 커넥션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가문은 푸거가문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독일과 에스파냐에서의 황제의 ‘통큰 정치(grosse Politik)’는 모두 푸거가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했다.

실제 합스부르크가가 프랑스의 샤를 8세와 프랑수아 1세와 대립하고, 플랑드르 공작의 반발을 제압하고, 동쪽의 오스만튀르크와 전쟁을 수행하는데 모두 푸거가의 황금과 야콥 푸거의 고갈되지 않는 신용지원이 배경이 됐다. 그 전에 칼 5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가 되는 데도 엄청난 푸거가의 자금이 투입됐음은 물론이다. 황실과 제국의 재정담당자들, 특히 합스부르크 가문 및

다른 유력 정치세력들과의 꾸준한 접촉으로 야콥 푸거는 언제나 정치의 가장 비밀스런 핵심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후원한 합스부르크가의 정치적 승리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나 헝가리, 티롤을 비롯해 합스부르크가가 새로이 얻은 지역에 언제나 합스부르크가와 함께 들어가 이윤을 창출했다.

합스부르크가의 막시밀리안 1세는 금은식기와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만찬상을 영주와 기사들에게 대접하며 자신의 막대한 부를 과시하려고 했지만 만찬 참석자들은

은 모두 밥상의 실질적 ‘전주(錢主)’가 야콥 푸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또 교황청과도 밀착해 교황청 주조 동전의 거의 모든 원료를 공급했으며 면죄부 판매와 수익금 전달에도 깊이 관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경유착으로 성장한 푸거가문은 정치권의 몰락으로 발목이 잡혔다. 그의 후계자인 안톤 푸거를 비

롯한 후손들은 16-17세기 네덜란드와 에스파냐 정부가 파산하면서 빌려준 돈들을 날리게 된다. 그가 뿌린 유착의 씨앗은 고속성장의 지름길이기도 했지만 후계자의 파멸을 잉태한 파괴의 요람이기도 했던 것이다.

자본주의도, 상업도, 국가재정도 아직 독자적인 분야로 충분히 발전되지 않고 서로 얽혀 있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인이 일군 업적과 영향력의 규모는 오늘날에 비취보더라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참고 문헌

- Jacob Strieder. (2001). 『Jacob Fugger the Rich-Merchant and Banker of Augsberg』. BeardBooks.
- Gordon A. Craig. (1983). 『The Germans』. Meridian.
- Jean Berenger. (1994). 『A History of the Habsburg Empire 1273~1700』. Longman.

맥을 짚어주는 재정·경제 신간도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경제 흐름을 이해할 수 없다.
또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주요 현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필요한 시기다.
이번 호 'KPFIS의 서재'에서는
최신 재정·경제 트렌드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핵심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쓴, 실속 있는 책 4권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교보문고



저자 김준영
출판사 매경출판
발간일 2019년 02월

불평등을 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플랫폼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이 책은 오랜 세월 대학에 몸담으면서 한국경제를 고찰해왔던 경제학자의 눈으로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갈등의 실상을 통계적으로 짚어본다. 한편, 범사회적으로 어떻게 통합의 콘텐츠를 공유하고 확산하면서 미래의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고찰한다. 저자는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뤄내는 동시에 불평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찰과 갈등이 사회통합이란 대의를 밀쳐내고 있는 모순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한국 경제성장은 사회통합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성장전략도 미래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책은 성장 동력을 개방적이고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네트워킹하는 플랫폼 성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저자 우병동, 김익식,
김종웅, 박병희, 임상수
출판사 대영문화사
발간일 2019년 02월

재정현상에서 지방재정까지, 재정학의 모든 것

알기 쉬운 재정학

이 책은 재정학에 대해 배우려는 대학생이나 실무자를 위한 책으로 재정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았다. 서두에서는 재정의 총론을 통해 재정현상의 개념, 그로 인한 재정현상의 성격과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재정현상에서 나아가 재정학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재정의 기능은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을 분배하는 기능을 하며 경제안정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개입이 필요한 점을 지적한다. 또한 공공지출 이론을 바탕으로 공공재의 적정 규모를 살펴보고 비용편익분석과 예비타당성분석 내용까지 담았다. 나아가 조세의 기본 원리를 살펴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관계도 함께 다뤄 수입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파트4를 통해서 정부 간 재정관계와 재정분권을 통한 경제적 효과도 다룬다. 이 책은 재정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모두 담고 있어 유용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저자 이동기
출판사 청림출판
발간일 2019년 02월

개정 세법을 반영한 속 시원한 절세 비법 56가지

세금을 알아야 부가 보인다

이 책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끼는 재테크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내 돈을 지키고, 아끼기 위해 '세테크'는 이제 남 일로 치부할 수 없게 됐다. 이 책은 이렇게 세금에 대한 작은 관심을 환기시키고, 부를 지키고 키우기 위한 세금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는 개정판은, 변화하는 부동산과 관련한 주택 중과세 개정 세법과 해외자산에 대한 세금 내용, 더 나아가 국제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추가했다. 기존의 53가지 절세 비법에서 이번 개정판에는 3가지 절세 비법이 더해져 총 56가지를 담았다. 특히 부록 부분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을 반영하고, 주택과 파생상품에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명확히 도표로 보여준다. 이 책은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6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에 맞춰 유용한 정보를 제시한다.



저자 이근, 류덕현 외
경제추격연구소
출판사 21세기북스
발간일 2018년 11월

대한민국 경제석학 34인이 제시하는 미래 인사이트

2019 한국경제 대전망

미국과 북한, 트럼프와 김정은의 '빅딜'로 남북한은 유례 없는 평화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의 유의미한 결과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더욱이 외부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헤게모니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무역 분쟁이 악화일로에 들어섰고, 미국의 지속적 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 특별성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10년 주기 외환위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국내로 눈을 돌려 '복지-조세-국가 채무'라는 '재정 트릴레마'가 큰 숙제임을 강조한다. 복지와 성장의 딜레마를 해결해야 하는 한국경제가 유럽식 복지국가의 함정을 뛰어넘어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지은이 경제석학 34인은 이 책을 통해 한국 내 경기 전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 상대국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2019년에 우리가 어떻게 위험요소를 줄이고 기회와 혁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재정정보원 소식

말레이시아 공무원 대상 FIMS 국제협력 실시



말레이시아 재무부 외 다부처 공무원들이 우리나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 배웠다.

말레이시아 공무원 연수단은 지난 3월 5일(화)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dBrain시스템의 구축 경험, 주요 기능, 운영 방법 등을 학습했다. 공무원들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주요 모듈 작동

법과 실시간 통계의 종류, 구축 시간과 비용 등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재정정보원은 재정정보화시스템(FIMS)의 구축·운영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함으로써 국제사회 재정정보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매년 20여 개국 재정담당 공무원들에게 dBrain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 ‘공무원행정실무 집중과정’ 강의 실시

한국재정정보원은 2월 26일(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dBrain시스템 교육을 진행했다.

공무원행정실무집중과정의 하나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dBrain시스템 조달 및 계약업무의 활용과 매뉴얼 이해’, ‘dBrain시스템 관서운영경비의 활용과 매뉴얼 이해’ 등의 분야에서 총 4시간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재정정보원은 공무원의 행정실무 및 직무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정기교육 이외에도 기관이 신청할 경우 이처럼 방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dBrain 재정데이터를 활용한 재정자료집 발간

한국재정정보원은 dBrain 내 방대한 재정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정리한 자료집 「2019 주요 재정 통계」와 「2019 회계·기금 운용 구조」를 발간하였다. 본 자료집의 시각화된 재정통계와 시계열화된 통계수치의 제공으로 향후 누구든지 재정의 모습을 쉽게 이해하고 재정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월간 「나라재정」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독자 퀴즈 정답과 함께 평소 재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을 “재정 Talk Talk”에
질문해 주세요. 매호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애독자 QUIZ

아래의 퀴즈 정답과 함께 “재정 Talk Talk”
질문을 연락처와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일컫는 재정 용어는?

- 애독자 퀴즈 정답 및 다양한 의견 보내주실 곳 -

이메일 _ narajaejung@kpfis.kr

애독자 퀴즈 정답 응모 기간 _ 2019. 03. 30. ~ 2019. 04.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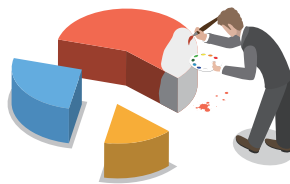
상품 당첨자 발표 _ 나라재정 4월호에 게재

☆ 2월호 ☆
애독자퀴즈 정답

국가채무

※ 당첨자에게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 size) 기프티콘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MONTHLY PUBLIC FINANCE INFORMATION



한국재정정보원
Korea Public Finance Information Service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el 02-6908-8200 Fax 02-6312-8959 www.kpfis.or.kr

